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정책학석사 학위논문

절차적 공정성 인식과 효과성 인식이
주요 시책 지지에 미치는 영향
: 경찰 수사권 독립과
자치경찰제도를 중심으로

2023년 0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전진우

절차적 공정성 인식과 효과성 인식이
주요 시책 지지에 미치는 영향
: 경찰 수사권 독립과
자치경찰제도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나 중 민

이 논문을 정책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03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전 진 우

전진우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06월

위원장 이진수 (인)

부위원장 임도빈 (인)

위원 나중민 (인)

국문초록

본 연구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요 시책들이 원래 의도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정책 지지를 이끌어내는 요인에 관하여 분석한다. 정당성을 구성하는 효과성 인식, 절차적 공정성 인식, 경찰신뢰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경찰 수사권 독립 지지와 자치경찰제도 지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 시민 1,621명을 대상으로 효과성 인식, 절차적 공정성 인식과 경찰 수사권 독립, 자치경찰제도 지지 간 관계에서 경찰신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효과성 인식은 경찰 수사권 독립 지지와 자치경찰제도 지지 모두 경찰신뢰를 완전 매개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절차적 공정성 인식은 경찰 수사권 독립 지지에 경찰신뢰를 부분 매개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양(+)의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자치경찰제도 지지에는 경찰신뢰를 완전 매개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얻은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해타산적 차원의 효과성 인식뿐만 아니라 규범적 차원의 절차적 공정성 인식 역시 주요 정책지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둘째, 서구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검증되어 온 절차적 정당성 이론이 국내 맥락에서도 외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경찰을 비롯한 정부 활동에 있어 주요 시책 추진에 대한 방향성과 이론적 근거를 제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함의를 제공한다.

주요어 : 절차적 공정성, 효과성, 경찰신뢰, 정책지지, 매개효과

학 번 : 2021-27385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1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3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4
제 1 절 경찰 수사권 독립 및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논의 4	
1. 경찰 수사권 독립에 관한 논의	4
2.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논의	6
제 2 절 경찰 효과성에 관한 논의	9
1. 효과성의 개념과 발전	9
2. 경찰 효과성에 관한 논의	11
제 3 절 절차적 공정성에 관한 논의	14
1. 절차적 공정성의 개념과 발전	14
2. 절차적 공정성 관련 선행연구	17
제 4 절 경찰 신뢰에 대한 논의	20
1. 신뢰의 개념과 발전	20
2. 경찰 신뢰의 개념과 발전	21
제 5 절 선행연구의 한계	22
제 3 장 연구방법	23
제 1 절 연구모형	23
제 2 절 변수의 측정 및 연구가설	23
1. 표본	23
2. 종속변수	24
3. 독립변수	24
4. 매개변수	35
5. 통제변수	26
제 3 절 연구문제	27
제 4 절 분석방법	28

제 4 장 분석 결과	30
제 1 절 기술통계분석 결과	30
제 2 절 상관관계분석 결과	33
제 3 절 매개효과 회귀분석 결과	38
1. 다중공선성 검정 결과	38
2. 매개변수인 경찰신뢰 회귀분석 결과	40
3. 경찰 수사권 독립 지지 분석 결과(매개변수 미포함) ..	42
4. 경찰 수사권 독립 지지 분석 결과(매개변수 포함)	44
5. 자치경찰제도 지지 분석 결과(매개변수 미포함)	46
6. 자치경찰제도 지지 분석 결과(매개변수 포함)	48
7. Sobel 검정 결과 및 종합	50
제 5 장 결론	53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53
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54
1. 연구의 의의	54
2. 연구의 한계	55
참고문헌	57
부록	65
Abstract	71

표 목 차

[표 2-1] 문재인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	5
[표 2-2] 정권별 자치경찰제도 도입안	8
[표 2-3] 다차원적 경찰 정당성 모형	13
[표 2-4] 경찰 정당성 개념화	16
[표 2-5] 경찰의 정당성 이론에 관한 주요 실증적 선행연구 정리	19
[표 4-1] 기술통계분석 결과	32
[표 4-2] 상관관계분석 결과	35
[표 4-3] 다중공선성 검정 결과	39
[표 4-4] 매개변수인 경찰 신뢰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 분석 결과	41
[표 4-5] 경찰 수사권 독립 지지 다중회귀분석 결과 (매개변수 미포함)	43
[표 4-6] 경찰 수사권 독립 지지 다중회귀분석 결과 (매개변수 포함)	45
[표 4-7] 자치경찰제 지지 다중회귀분석 결과 (매개변수 미포함)	47
[표 4-8] 자치경찰제 지지 다중회귀분석 결과 (매개변수 미포함)	49
[표 4-9] 경찰 수사권 독립 지지 모형 Sobel 검정 결과	50
[표 4-10] 자치경찰제도 지지 모형 Sobel 검정 결과	51
[표 4-11] 연구가설 채택 또는 기각 여부 정리	52

그림 목 차

[그림 3-1] 연구모형	23
[그림 3-2] 총효과 모형	28
[그림 3-3] 매개효과 모형	28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행정 조직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주요 시책들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조직의 절차적 공정성과 효과성 중에서 어떠한 요인이 더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보는 것에 있다. 성공적인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정책 집행에 있어서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내부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신뢰와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특히 정책에 있어서 시민의 협력과 지지는 정책 시행의 추진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경찰의 사례를 활용하여 최우선 시책으로 실시하는 자치경찰제도 및 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하여 절차적 공정성 인식이 동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에 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경찰 조직의 효과성 인식이 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면서 앞으로 정책 결정에 있어서 국민의 지지로부터 정책 시행에 대한 탄력을 얻기 위해 행정기관이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할 조직의 목표가 무엇인지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또한 본 논문은 이를 한국적 맥락에서 분석하여 한국에서도 절차적 정당성 또는 성과가 정책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경찰이 시행하는 자치경찰제와 수사권 독립은 최우선적 시책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외부의 정치적 요인과 이에 대한 지지도가 변하면서 시행에 거듭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치경찰제의 경우 국민의 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부 및 정치권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정치적 논쟁에 따른 개정을 거듭하며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수사권 독립 역시 2011년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경찰이 시도해온 핵심 과제이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 간의 조율에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20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여전히 검찰, 경찰을 비롯한 정부와 정치권, 이해관계 집단과 국민들에서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지만 반발에 직면한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경찰뿐만 아니라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정부의 절차적 정당성과 기대되는 성과 중 어떠한 요인이 정책에 대한 지지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 밝혀보는 것이 필요하다.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를 통한 시민의 정책지지 향상은 앞으로도 중요해질 것이

다. 최근 들어 COVID-19 대유행이나 사회 문제들과 결부되어 급변하는 피싱 등 범죄와 같이 유동적이고, 복잡하며, 불확실하고, 전례가 없는 난제(Wicked Problems)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지닌 한정된 자원과 인력만으로는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의 역량을 넘어서 행정, 정책, 형사사법학 등 분야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협조, 지지, 참여를 이끌어낼 대안들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시민들은 수혜자일 뿐만 아니라 가치있는 공공 서비스 기여자 또는 공동 생산자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형사정책에서는 수사기관이 강력한 감시와 처벌을 통하여 범죄를 줄이는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 중심의 접근법에서 벗어나, 형사절차 및 사법기관에 대한 정당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국민들의 지지와 이에 기초한 공동체적 협력 관계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로 이어져 난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즉, 국민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단순한 권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활동에 대한 내면적인 당위성에 기초하여 자발적으로 정부 활동에 대한 다양한 노력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신뢰한다는 것이다(Sunshine and Tyler, 2003; Tyler, 1990; 2006; 2011; 2017; Tyler and Fagan, 2008; Tyler and Huo, 2002; Tyler and Lind, 1992).

현재까지 진행된 실증연구들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미국을 비롯한 서구권 국가들과 그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고 세부적인 치안정책이나 COVID-19과 같은 특정 정책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들과 다른 아시아를 비롯한 비서구권 국가의 제도, 문화 차이나 경제 발전 정도의 차이에 따라 어느 수준까지 타당성을 지니는지 혹은 재현 가능한지 알려지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일반화 가능성과 이론적 타당성, 정책적 시사점 도출에 매우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대한민국 경찰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도 범죄율, 검거율, 범죄 두려움에 있어서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경찰에 대한 정당성 인식은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OECD, 2022). 최근 자료를 기준으로 2021년 기준 OECD 국가들은 평균 67.11% 시민들이 경찰을 신뢰한다고 응답한 반면 한국은 평균 51.21%만이 경찰을 신뢰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역사적으로 일제 강점기 및 군사 독재 정권을 거치면서 강력한 권위에 기반한 강제적, 비자발적 순응을 경험한 국민들은 공권력의 공유, 재생산 등 공동체적 역할 수행 등 참여를 통한(Voorberg, 2017) 경찰 정당성 인식과 이에 기초한 자발적 순응과 협조에 제한적이고 미온적일 수밖에 없다고 추측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경찰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노력에 이론적, 실증적 증거

를 제공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방향성과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경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안도 탐구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이 연구는 연구자의 지도교수 및 경찰청이 기존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2022년에 자체적으로 실시한 경찰청 업무 국민 인식조사 설문을 토대로 한다. 분석대상은 개인이며, 대한민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70세 미만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수집된 총 표본 수는 1,621명이다. 2022년 한 개 시점에서 수집된 자료이므로 횡단면 자료(cross-sectional data)에 해당된다. 표본 추출 방법은 층화 표본 추출법을 통해 추출되었다. 또한 교란변수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교적 동질적인 집단에서 추출하고자 수도권 지역(경기, 서울, 인천) 시민들만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표본 및 추출에 관련한 내용은 아래 변수의 측정 및 연구가설의 표본란에 상세히 서술하였다.

공공기관 대다수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연관된 만큼 절차적 공정성과 효과성 인식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공공기관 중에서 경찰 조직의 사례를 중심으로 절차적 공정성과 효과성 인식이 주요 시책 지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연구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경찰이 추진 중인 주요 시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경찰 수사권 독립과 자치경찰제도의 개념, 추진배경, 경과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둘째, 공공기관 및 경찰 조직 관점에서 효과성과 절차적 공정성의 이론적 측면을 검토하였다. 특히 경찰과 같은 정부 활동에 자발적으로 순응하고 협력하는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절차적 공정성과 효과성 인식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절차적 공정성과 효과성의 이론적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셋째, 이를 중심으로 절차적 공정성 및 효과성 인식이 한국 경찰의 주요 시책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다만 경찰 외 다른 공공기관의 자료를 연구에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본 연구의 제약에 해당된다.

제2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1절 경찰 수사권 독립 및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논의

1. 경찰 수사권 독립에 관한 논의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실질적으로 경찰이 모든 수사과정에 개입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전체 수사권을 지녀 이에 따른 수사 주체와 권한 간 괴리와 수사권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이 지닌 수사권을 경찰에게 이양하는 것이다. 현재 검찰이 수사권 일부를 보전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경찰 입장에서 수사는 온전히 경찰이 담당하고 기소 등 법리 검토 및 법 제도와 관련한 사안은 검찰이 담당하도록 ‘완전한 수사권 독립’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한 기관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분리하여 민주주의적 통제를 구축하고 견제와 균형을 통해 헌법상의 권력분립의 원칙을 지키며 수사와 기소라는 성격이 다른 형사사법기관의 행위를 분리하여 수사기관으로서의 경찰과 법적 심사기관으로서의 검찰의 전문성을 살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박준희 외, 2019). 그러나 수사권 조정은 오랜 기간 논쟁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관심도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지지를 받지 못한 채 도입에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처음 논의가 시작된 것은 이명박 정부 때이다. 2011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여 의결했다. 위 안에서는 검사의 수사지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시 경찰의 이의제기를 허용하고 검찰의 수사지휘는 서면지휘를 원칙으로 규정하였다.

이후 수사권 조정 논의는 2016년 검찰 개혁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 시기 국회에서는 검찰이 수사권 없이 영장청구권만 유지하는 안(표창원 안), 1차 수사권은 경찰이 가지되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유지하며 경찰비리나 대형 경제사건은 검찰이 직접수사 가능한 제한적 수사권 보유 안(금태섭 안), 사법경찰관이 검찰과 무관하게 직접 수사 가능하며 영장 청구 역시 검찰 독점없이 실제 수사하는 기관이 집행하는 안(이동섭 안), 이의제기 없으면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되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관련인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수사 가능

한 안(박범계 안) 등 다양한 수사권 조정 안건들이 발의되며 국회 내에서도 다양한 논쟁이 오고갔다.

가장 수사권 조정에 적극적이었던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부, 국회 차원에서 본격적인 수사권 조정 절차가 진행되었다. 2018년 1월 청와대는 일반 수사를 경찰이 맡고 2차 및 보충 수사, 경제·금융 수사는 검찰이 맡도록 하는 조정안을 발표하였으며 법무부 역시 검찰의 사건 송치 전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1차 수사권, 지휘권을 제한하면서 영장 심사와 긴급체포 승인은 계속 검찰이 담당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동년 6월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문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발표하면서 수사권 조정 역시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채택되었다. 그리고 2020년 1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의결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법률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수사권 조정안 처리 및 도입에도 불구하고 두 형사사법기관 및 정치권의 갈등으로 인하여 논쟁은 여전하다.

[표 2-1] 문재인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2017-2020)

날짜	수사권 조정 과정
2017-06-27	법무부장관에 검찰 개혁을 주장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상기 교수 내정
2017-07-04	검찰총장에 문무일 부산고등검찰청장 임명
2017-11-14	경찰개혁위원회,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제시 - 기존 행정안전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이동, 경찰도 경찰위원회 산하로 이동 권고 -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하되, 경찰 출신은 임명 불가 - 경찰위원회는 검찰청장 임명제청 및 총경 이상 보직 인사 심의·의결
2017-12-07	경찰개혁위원회, 수사권 조정안 발표 - 검찰의 수사지휘권, 직접수사권 폐지, 경찰비리는 검찰이 직접수사 가능 - 단, 수사종결권은 그대로 검찰이 보유하여 검·경 상호 견제 - 영장청구권도 헌법 개정을 통하여 '검사의 신청' 문구 삭제 요청
2018-01-14	청와대 수사권 조정안 발표 - 일반 수사는 경찰이 담당, 필요할 경우 2차 보충 수사는 검찰이 가능 - 경제, 금융 등 특수 대형 사건 수사권 및 기소권은 검찰만 가능
2018-02-08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수사권 조정 권고안 발표 - 경찰이 수사 중인 개별 사건에 대한 송치 전 검찰의 수사지휘 폐지 - 검사의 영장청구권, 긴급체포 승인절차 유지 - 검찰의 1차 수사권, 지휘권은 부패, 경제·금융, 공직자, 선거 범죄로 한정 - 경찰 공무원이 연관된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 - 경찰은 검찰의 송치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 시 이의신청 가능

	- 검찰은 인권침해 우려가 있거나 관련자의 이의제기시 경찰에 기록 송부, 사건 송치 요구 가능
2018-06-20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 검찰의 송치 전 수사지휘 폐지 - 경찰은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 보유, 검찰 1차 수사는 필요한 분야 한정 - 검찰은 기소권, 특정 사건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 보완수사 불응 시 직무배제 및 보완요구권, 경찰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시정조치 불응 시 송치 후 수사권 보유 - 검찰 직원 수사 시 경찰의 영장청구에 대하여 즉시 법원에 청구 의무 -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 시 수사우선권 인정
2020-01-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 대통령 공포 후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결론적으로 자치경찰제와 수사권 독립 모두 국민의 반발로 인하여 경찰 입장에서 불완전한 목표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자치경찰제에 있어서 경찰은 초기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도입하는 안을 기초로 하여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지역 유지들과의 유착 우려 등으로 인하여 제주특별자치경찰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그쳤다(박동수, 2021). 이후에도 기초지방자치단체에만 도입하는 의견,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의 지휘를 받는 일원화 모형 등 완전한 자치경찰제가 아닌 불완전한 제도의 도입과 무산이 반복되었다. 수사권 독립 역시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이 기소를 담당하여 실제적인 범죄 검거, 예방, 치안유지 등 실질적인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검찰은 법리 검토, 기소, 영장 청구 등 법제적인 측면에서 역할을 하는 것을 기대하였으나 현재 경찰의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는 국민 우려에 따라 불완전한 수사권만을 이양받았다.

2.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논의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의 설치·운영·유지를 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중앙정부가 경찰의 설치·운영·유지를 담당하는 국가 경찰과 대조된다. 국가경찰과 대비되는 자치경찰의 장점으로서는 첫째, 정치적 중립성을 지녀 법과 원칙에 따라 오로지 지역 주민의 치안 수요에 대응하는 치안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 특히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음으로써 중앙정부의 정치적 의도나 영향력과 관계 없이 민생치안 등 본래 경찰 목적에 맞는 행정을 달성할 수 있다. 둘째, 검찰 및 국가정보원과의 수사권 조정으로 막대한 경찰의 권한을 분산시킬 수 있다. 비록 체류되고 있긴 하나, 2020년 경찰은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1차 수사종결권을 지니며, 심지어 국정원의 대공수사

권까지 이양받게 된다. 이렇게 비대해진 경찰 권력 구조를 유지할 경우 견제할 수단의 미비로 폐해를 야기할 수 있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로 그 권력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행정안전부, 2019). 이는 영장청구권, 수사개시·종결권, 수사지휘권, 기소권 등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활동해온 검찰을 견제하는 목적으로 경찰에게 수사권 일부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경찰 역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부패한다면 수사기관의 부패를 방지하고자 하는 수사권 조정의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두 장점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 도입에 대한 논의는 20년 넘게 논쟁이 되어 왔다. 각 정부에 따른 자치경찰제 논의와 주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국민의 정부는 자치경찰의 도입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여 1999년 자치경찰제 시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광역 단위에 자치경찰제를 전면 도입하고 자치경찰이 포괄적 사무를 수행하되, 국가경찰이 예산·인사로 이를 통제한다는 것이다. 조직 측면에서 국가 또는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찰위원회는 합의제 기구로서 경찰청 업무기준과 방침을 담당한다(황문규, 2020). 이러한 경찰위원회의 존재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참여정부 역시 자치경찰제 도입을 핵심과제로 선정하였다. 특히 참여정부는 지방자치 및 분권을 통하여 지방발전을 달성하는 것을 시책으로 삼고 자치경찰제를 추진하였다. 특히 2005년 11월 정부의 자치경찰법안이 제출되었고, 동년 12월에는 국회에서도 유기준 등 국회의원 12인의 자치경찰법안이 제출되었다(정부안; 의원안 인용). 게다가 이 과정에서 추가로 시·도지사협의안도 제출되어 자치경찰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당해법률 제106조에 따라 제주도에서 제한적인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다만 참여정부 시기 권력기관별 자치경찰법안은 정부안이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을 도입하려고 했으나 국회안, 시·도지사협의안은 광역자치단체에도 자치경찰을 도입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명박 정부 역시 자치경찰제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으나 기본 입장은 이전 정부의 자치경찰법률안을 기본 틀로 유지하면서 광역단위의 자치경찰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광역자치단체장의 자치경찰 통합운영권, 시·도별 자치경찰지원관 채용 및 자치경찰협력관 파견 등의 방안이 제안되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방분권강화를 목표로 하는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한 실무안까지 연구용역을 통하여 개발할 정도로 자치경찰제 도입에 적극적이었으나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인하여 실제 시행되지는 않았

다. 또한 2013년 국회에서 이철우 외 국회의원 13인의 경찰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역시 임기만으로 폐기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자치경찰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정부로 볼 수 있다. 수사권 조정과 더불어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경찰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2022년까지 43,000명의 기존 경찰관을 자치경찰로 전환하기로 계획하였다. 이후 2020년 12월 자치경찰제를 포함하는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2021년 7월부터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하고 자치경찰위원회가 발족하게 되어 자치경찰제의 제도적 도입이 현실화되었다.

[표 2-2] 정권별 자치경찰제도 도입안

구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도입 단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조직	시·도경찰청 시·군·구경찰서	시·군·구자치경찰대	시·군·구자치경찰대	시·군·구자치경찰단	시·도자치경찰본부 시·군·구자치경찰대
위원회	시·도경찰위원회	시·도치안행정위원회 시·군·구지역치안협의회	기초자치경찰위원회 광역자치경찰조정위원회	시·군·구자치경찰위원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도경찰위원회
인사	경정이상 국가직 경감이하 지방직	지방직(특정)	지방직(일반·특정)	-	단계적 지방직 전환
예산	국가경찰사무경비 국가지원	국가 재정 지원, 자치경찰사무 감사	국가 재정 지원, 자치경찰 관리·감독	지방소비세, 과태료, 범칙금 등 이관	국가의 재정적 지원, 초기 인건비 국가 부담
업무	방법, 교통, 수사 등	생활안전, 교통, 경비, 특사경사무 등	치안, 일부수사 사무 개인적법익침해 수사	생활안전, 교통, 경비, 여청, 특사경업무 등	생활안전, 여청, 교통, 경비, 수사 (일부)업무 등
통제	국가경찰대에 의한 지휘·감독	시·도지사 재의요구권, 행자부장관 감사권	광역자치경찰조정위원회 조정권에 강제성 부여	자치경찰위원회 관리·통제	중앙정부의 지도·감독, 이행·시정명령
기타	중앙수사국이 광역범죄 대처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	-	-	-

출처: 형사정책연구원(2020) 재구성

제2절 경찰 효과성에 대한 논의

1. 효과성의 개념과 발전

효과성을 설명하기 이전 절차적 공정성과 효과성을 통해 보고자 하는 상위 개념인 정당성에 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경찰이 범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치안을 확보하고자 주요 시책들을 추진하려면 경찰과 시민, 사회가 직면한 난제(Wicked problem)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단독적인 활동이나 강압적인 통제만으로는 부족하므로(Bayley, 1990) 시민들의 자발적인 순응과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수적이다(류준혁, 2015). 민주주의 국가가 법 집행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인 법의 지배(Rule of law)는 권력을 통제하고 법 앞의 평등을 보장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 사회의 안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는 수단이다. 법의 지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기본권 보장 역시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공동체의 신뢰 형성을 제한하고 개인의 자발적 참여·협조를 통한 정치 체제의 동의와 그 결과에 대한 수용이 저해될 가능성이 커진다(김다운, 2022). 법의 지배는 단순히 제도의 존재에 의해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모든 절차와 과정이 공정하게 집행될 때 그리고 시민들이 이러한 공정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존중하고 준수할 때 실현될 수 있다. 이때 정부의 권력이 시민에게 인정받고 합법적으로 정부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만드는 개념이 정당성이다. 초기 정당성 개념은 지배층의 통치권에 대한 주장이 피지배층 집단의 인정과 결합할 때 현실에서 타당성을 획득한다고 보았다(Coicaud, 2002). 즉 안정적인 지배를 위해서는 피지배자들이 의무나 공포,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질서, 정당성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Weber, 2019).

이러한 초기의 정당성 개념은 큰 비판에 직면한다. 우선 정당성의 측면은 크게 규범적(Normative) 측면과 경험적(Empirical) 측면으로 나뉜다. 규범적 측면의 정당성은 정의나 합리성과 같이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치철학적 가치 판단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운영되는 제도권 내 사회과학적 측면의 경험적 정당성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본다(Hinsch, 2008). 또한 초기 정당성의 개념은 시민으로부터 권력을 인정받는 경험적 측면만을 강조하였으며 규범적 측면의 정당성이 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Hinsch, 2010). 또한 Beetham(1991)은 현대 사회의 다양한 국가 및 사회의 지배유형을 구분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합법성(Legality)은 정당한 지배는 명문화된 규칙 또는 법에 의해 획득되고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규범적 정당화(Normative justifiability)는 앞서 언급한 규칙 또는 법이 정치적 권위를 정당화 할 수 있는 널리 인정된 원칙들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표출된 동의(Expressed Consent)는 이 권위를 부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예: 주권을 지닌 시민)에게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보편적인 세가지의 정당성의 기준을 통해 사회적, 문화적으로 차이가 나타나는 각 국가 또는 정부의 정당성이 발현되는 모습을 살펴보는 맥락적 정당성(Legitimacy in context)를 강조하였다.

효과성(effectiveness)이란 일반적으로 처음에 설정한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지에 관한 목표 달성도를 뜻한다. 조직효과성에 대한 개념도 연구자마다 다르게 인식하므로 확립되지는 않았으나 좁은 의미의 조직목표의 달성도가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진다. 조직효과성의 모호한 개념을 이해하려면 조직효과성의 접근법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 중 단일차원의 조직효과성 접근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민진, 2003; 이경호, 2014). 첫째, 목표달성 접근법(goal approach)이다. 목표달성 접근법에서 조직의 효과성은 주로 조직의 산출 측면에서 설정된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조직은 목표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기구로 여겨진다. 둘째, 체제자원 접근법(resource-based approach)이다. 체제 접근법에서 조직효과성은 조직의 지속적인 존속과 유지를 의미한다. 이 접근법은 조직이 바람직하게 존속하는데 필요한 수단에 집중하게 되고 이때 조직효과성은 조직 존속에 필요한 자원의 획득을 의미한다. 셋째, 내부과정 접근법(internal process approach)은 조직의 효과성이 내부적인 조직의 건강과 능률성에 의해 측정된다고 본다. 이때 조직구성원의 만족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외부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내부의 효율적인 통제에 초점을 맞추는 특징이 있다.

효과성 개념의 발전은 행정학에서 성과관리의 발달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경제학적 논리에 기반한 이론인 공공선택론과 신공공관리론이 대두되면서 계량적인 지표가 중심인 고객 지향적이고 결과 지향적인 관리기법이 공공부문에 도입되었고, 서구권 국가를 중심으로 결과에 기반한 관리(managing for results)가 강조되기 시작하였다(Monyhan, 2006; Micheli & Neely, 2010). 이는 조직효과성의 목표달성 접근법에 해당된다. 이러한 성과관리의 영향으로 공공부문에서의 효과성 측정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이선우·임현정, 2012). 즉 정부와 각 기관 역시 민간의 성과관리기법을 통하여 업무결과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정부 활동의 대안을 탐색하고 정부 활동을 관리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본다. 성과관리는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의 역할을 하고 해당 공공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지닌다(최낙범, 2022). 따라서 성과관리는 조

직의 임무달성과 성공을 목표로 ‘어떠한 활동을 해야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 업무 절차 수정, 구성원의 인식과 행태 제고 역할을 수행한다. 성과관리의 시작은 미국의 경우 1993년 「정부성과 및 결과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GRPA)을 통해, 영국의 경우 이보다 앞선 1982년 재무관리정책(Financial Management Initiative, FMI)를 통하여 도입되었다. 우리나라는 2006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정으로 공공부문 및 중앙정부의 통합성과 관리체제를 확립하면서 본격적인 성과관리를 시작하였다. 경찰에서는 미국 Compstat 제도가 시행되면서 경찰 부문에서도 결과지향적인 성과관리 방식이 도입되었고 이는 전세계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 경찰도 이에 영향을 받아 치안통합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 경찰 효과성에 관한 논의

전통적 경찰 활동에서 효과성이란 투입된 비용 대비 조직 목표 성취를 기준으로 하는 능률성과 생산성에 초점을 맞추었다(최낙범, 2022). 특히 전통적 경찰 활동에서는 앞서 공공부문의 경제학적 논리 도입과 마찬가지로 범죄 대응 성과를 정량적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강했다(Beccaria, 1963; Becker, 1968). 가령 경찰관 1인당 검거 건수(전체 검거 건수/총 경찰관 수)와 같이 산출된 수치에 중점을 둔 경찰 효과성을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능률성과 생산성 중심의 관점은 행정은 정치와 분리되어 단지 정치적 의도를 실현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는 행정의 과학화와 연관이 있다(Simon, 1947). 이러한 관점에서 경찰은 최소 투입, 최대 산출의 공리주의적 접근법에 기반하여 범죄 원인과 범죄 현상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고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탐색하며 인력, 예산, 장비, 수단 등 양적 투입을 통하여 억제하고자 시도한다. 결국 전통적 관점에서 투입한 비용 대비 성과가 낮은 치안정책은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으로 인식하고 범죄 예방 대안으로서 배제되게 된다.

과거 경찰과 같은 강력하고 적극적인 사법 집행기관의 전략은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에 기반하였다. 이는 경제학에서 비롯되는 이해타산적 관점의 합리적 선택 이론(rational choice theory)과 연관되어 있다. 억제이론과 합리적 선택 이론은 공리주의라는 같은 학문적 뿌리에서 발전된 이론이라 유사한 측면이 많다(Gibbs, 1968). 합리적 선택 이론에 따르면 합리적 주체로서 개인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력하고 강압적일 때, 범죄에 따른 편익보다 처벌이라는 비용이 더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범죄 행위를 기피하게 된다(Becker, 1968). 정부가 사법기관

을 구성하고 시민들이 비행·범죄 행위 발생 시 이러한 사법기관의 판단을 구하는 행위는 기초적으로 시민들이 공권력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바로 이러한 믿음이 강제적인 공권력의 특성에서 비롯된다고 본다(Bittner, 1970). 따라서 과거 경찰의 전략 역시 잔혹하고(severe), 신속하며(Swift), 확실한(Certain) 처벌에 기반한 치안 정책을 수행하였다(Tittle, 1969).

이러한 계량적 효과성과 성과의 강조는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였다. 우선 효과성 측정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비롯하는 단점이 있다. 공공부문의 효과성을 정확히 측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공공조직은 목표가 모호하고 다차원적인 업무로 구성되어 있어 공공부문인 경찰 조직의 성과 측정 및 평가 역시 어려울 수밖에 없다. 형사정책 분야에서도 ‘경찰 효과성을 어떻게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학문적 동의는 현재에도 이뤄지지 않고 있고(Falkenberg et al., 1991; Sanders, 2008) 경찰 활동은 매우 다양한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Holgersson & Knutsson, 2012). 따라서 실질적으로 경찰 활동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숙련된 실무자뿐이라는 지적도 존재하며(Reiner, 1998) 효과성 측정에 많이 활용되는 지표인 범죄율이나 검거율에서 더 나아가 특정 범죄나 치안에 대해 잘 숙지하지 않은 시민을 대상으로 범죄 두려움이나 지역경찰에 대한 신뢰 등 인지적 지수를 성과로써 측정하는 것은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사회경제학적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표로써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Feilzer, 2009). 검거율이나 범죄율 같은 정량적인 실적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다 보니 무리한 실적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이 등장하였다(이선우·임현정, 2012). 가령 과잉수사로 인한 인권 침해,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직원·조직 간 갈등 심화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 밖에도 효과성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가 등한시되는 등 여러 부작용의 등장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둘째, 경찰의 활동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며 자발적인 시민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경찰 정당성 이론은 경찰이 성과에 기반한 효과성을 추구하는 것보다 절차적 공정성 확보를 통해 정당성을 획득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법 준수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범죄 예방과 치안 유지에 더 효과적이라고 비판한다(Lind and Tyler, 1988; Sunshine and Tyler, 2003; Tyler, 1990, 2003; Tyler and Fagan, 2008; Tyler and Huo, 2002; Tyler and Lind, 1992). 이해타산적 관점에서 시민들은 자극이나 처벌 위협 등에 기초한 자기 이익에 따라 행동을 결정하는데(Nagin, 1998), 경찰에 협력하는 것은 합리적 개인에게 단기적 이익을 제공하지 않아 경찰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임창호, 2021). 또한 억제이론에서 처벌의 엄중성에 대한 범죄예방 효과가 미미하

다는 연구들이 다수 제기되면서(Pratt et al., 2017; Nagin & Pepper, 2012) 결과 중심적 효과성은 시민들의 선호가 무엇인지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발생하였다(Gallagher et al, 2001; Jackson & Bradford, 2010; Maslov, 2016). 또한 경찰의 고객은 시민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요구, 만족 등의 시민 가치는 반영되지 못했다는 주장도 대두하였다(Moore & Braga, 2003).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경찰 효과성은 여전히 정당성의 구성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Sunshine & Tyler(2003) 역시 절차적 공정성이 경찰 협력에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하긴 하였으나, 효과성과 대등한 개념인 경찰 성과와 절차적 공정성을 정당성을 구성하는 2단계 모형(two-staged model)을 제시하였다(Tyler & Huo, 2002; Sunshine & Tyler, 2003). 또한 Tankebe는 경찰 효과성은 경찰 정당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라 주장하고 일련의 정당성 연구에서 모형에 경찰 효과성을 포함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Tankebe, 2009; Bottoms & Tankebe, 2012;). 이후 Tankebe et al.(2016)는 기존 경찰 정당성 모형의 한계를 보완하는 다차원적 경찰 정당성 모형을 제시하면서 합법성, 절차적 공정성, 배분적 공정성, 경찰 효과성을 통해 경찰 정당성을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표 2-3] 다차원적 경찰 정당성 모형(Tankebe et al., 2016)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합법성 (lawfulness)	복종해야 할 의무 (obligation to obey)	경찰에 대한 협력
배분적 공정성 (distributive fairness)		
절차적 공정성 (procedural fairness)		
효과성 (effectiveness)		

제3절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논의

1. 절차적 공정성 개념과 발전

초기의 정당성의 개념의 발전 과정에서 영향을 받은 현대의 절차적 정당성(procedure legitimacy)은 사법기관의 집행 절차·제도·권위 등이 정당하고 따를 만하다고 느끼게 하는 자산을 의미한다(Sunshine & Tyler, 2003). 특히 경찰과 같은 형사사법기관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은 이해타산적 관점(instrumental perspective)과 달리 자발적인 시민들의 권위에 대한 협조·참여·협력을 뜻하며 더 강한 효과를 발휘하고 지속성이 강한 특징이 있다.

이러한 억제이론 또는 이해타산적 관점의 치안 정책이 장기적인 시민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대두되면서 최근 서구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강압적이고 가혹한 억제 전략보다 사회적 관점에서 사법기관의 정당성을 시민들 스스로 인식하였을 때 자발적으로 사법기관에 협력한다는 이론이 대두되었다. 미국에서는 경찰 정당성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순응(voluntary compliance)은 처벌의 두려움 때문이 아닌 정부활동 자체의 정당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Tyler, 1990). 이후 실증적으로 절차적 정의(procedure justice)라는 중요한 변수를 중심으로 논의가 더욱 발전되었다. 미국에서는 위 개념을 바탕으로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한 결과 절차적 공정성은 매개효과 또는 직접적으로 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Sunshine & Tyler, 2003). 특히 경찰에게 권한 부여(empower police), 경찰과의 협력(cooperate with police), 법 준수(compliance with law) 등의 결과변수가 경찰활동의 정당성을 통해 확보될 수 있으며 인종적 차이에 의해서도 결과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Tyler et al., 2010). 또한 Sunshine & Tyler(2003)은 미국 뉴욕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경찰과 시민이 서로 접촉하여 상호작용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의 실천적 개념으로 재구성하였다. 이에 따르면 절차적 정당성은 크게 4가지 구성요소로 나뉜다(Tyler, 2004). 첫째 참여(participation)이다. 참여는 절차적 정당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경찰활동과 연관된 시민이 경찰이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다. 둘째, 중립성(neutrality)이다. 중립성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은 태도와 의사결정에서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 지표를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존중(respect)이다. 시민들은 경찰관으로부터 존중과 더 나은 대우를 받을수록 정당성

에 대한 인식을 강화한다. 이는 경찰 의사결정의 결과와는 반대인데,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이 나오더라도 존중받는 느낌을 받았다면 이를 수긍한다는 것이다. 넷째, 신뢰(trust)이다. 시민들은 경찰이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하고 이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활동한다고 믿으면 절차적인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커진다. 단, 시민들이 객관적 자료와 기준에 따라 경찰활동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뢰에 있어서 경찰의 태도가 크게 좌우한다. 즉 경찰이 업무에 관하여 이유와 내용, 행동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시민의 의견을 적극 경청한다면 시민들이 경찰을 신뢰한다는 것이다. 위 4가지 구성요소를 적용하여 경찰이 현장에서 활동한다면 시민들이 경찰의 치안 행위가 절차적으로 공정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인식이 절차적 정당성 개념을 구성하여 자발적인 법 준수와 경찰에 대한 협조로 이어진다는 것이 경찰 정당성 모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Tyler, 2004). 이를 바탕으로 다수의 이론적·실증적 후속 연구들을 통하여 전통적인 경찰 활동에서 정당성의 핵심 구성요소로 이해된 효과성과 최근 연구에서 중요한 구성요소로 드러난 절차적 공정성으로 구성된 경찰 정당성의 2단계 모형(two-staged model)이 제안되었다(Lind and Tyler, 1988; Sunshine and Tyler, 2003; Tyler, 1990, 2003; Tyler and Fagan, 2008; Tyler and Huo, 2002; Tyler and Lind, 1992).

한편,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및 유럽에서도 이러한 절차적 공정성이 경찰에 대한 협력을 야기한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경찰에게 정지 명령을 받았을 때 시민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에서도 경찰이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거나 경찰의 태도가 공손한 경우, 경찰의 정지 명령이 부당하지 않다고 시민 스스로 인식한 경우 등 절차적 정당성이 갖춰졌다고 인식하면 경찰 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여기는 것으로 드러났다(Stone & Pettigrew, 2000). 또한 영국 England 및 Wales 지방을 대상으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저지를 수 있는 일탈(예: 쓰레기 무단투기, 절도 등)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당성 모형을 적용하여 조사하였는데 경찰 효과성보다 절차적 공정성이 경찰 활동에 대한 유대감을 야기하고, 이 유대감으로 인하여 시민의 일탈이 감소하고 그밖의 경찰과의 접촉경험도 중요한 일탈 행위를 감소시키는 요인임을 주장하였다(Jackson et al., 2012). 또한 이러한 경험적 측면에서의 정당성을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Hinsch(2008), Beetham(1991)의 논의를 바탕으로 경찰 정당성의 요인들을 개념화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졌다(Jackson et al., 2010; Hough et al., 2013).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시민과 경찰 간의 자발적인 협력을 유도하고 법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경찰 본연의 범죄에 대항하는 성과도 중요하지만 경찰이 절차적 공정성과 분배적 정의를 확보하여 경찰과 시민의 유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나타났다(이명섭, 2017).

[표 2-4] 경찰 정당성 개념화(Jackson et al., 2012)

구분	Hinsch(2008)의 정당성 요인	측정
경찰 정당성	합법성 (Legality)	경찰 지시에 동의하지 않아도 그 지시에 대한 복종 여부
	표출된 동의 (Expressed consent)	소속 집단의 가치와 도덕이 경찰의 결정과의 부합 여부
	규범적 정당화 (Normative justifiability)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

이후 절차적 정당성의 구성요소에 대한 논의는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경찰 권한 행사의 주체인 경찰관의 인식까지 고려하는 양자 대화적 구조(Dialogic approach)를 강조하는 측면으로 발전하였다(Bottoms & Tankebe, 2012). Bottoms & Tankebe(2012)는 앞서 Weber(1925)가 주장한 정당성 확보에서 권력자는 스스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또 다른 권력을 쟁취하길 희망하는 사람은 그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들과 통치를 받는 일반 시민들 사이의 대화를 통한 관계적인 개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또한 시민들 대상의 연구에서도 정당성 하나만을 변수로 측정할 것이 아니라 현재에 해당되는 정당성 변수와 미래에 대한 기대에 해당되는 신뢰(Trust)를 구분하여 측정해야 된다고 지적하였다(Jackson & Gau, 2016; Bottoms & Tankebe, 2012). 또한 Beetham(1991)의 논의를 바탕으로 시민과 경찰 간의 양자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 만큼 경찰관의 인식을 고려하는 연구를 통해 ‘상관으로부터 받는 대우’, ‘동료들과의 관계’, ‘시민들의 반응’, ‘경찰 효과성’ 등이 경찰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로 측정할 것을 주장하였다(Tankebe, 2014). 즉 경찰의 민주적이고 절차적이며 정의로운 운영이 경찰 조직 스스로의 정당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민주적 경찰 활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Bradford & Quinton, 2014).

2. 절차적 공정성 관련 선행연구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서구권을 중심으로 경찰의 절차적 정당성의 외적 타당성 및 연구의 보편성을 검증하는 측면에서 확장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Tyler, 2003, 2006a, 2006b; Sunshine & Tyler 2003; Tyler & Fagan, 2008; Tankebe, 2010; Sargeant et al., 2014). 앞서 언급한 미국, 영국 뿐만 아니라 호주에서는 인종이 절차적 정당성이 경찰 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한다는 결과가 나타났고(Murphy & Cherney, 2011), 특히 베트남 및 인도계 주민에게는 절차적 정당성이 경찰 협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Sargeant et al., 2014). 호주 Queensland는 QCET(Queensland Community Engagement Trial)라는 현장실험연구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이 경찰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는데 처치-통제집단의 무작위 실험을 통하여 음주운전 단속 시행 결과, 음주운전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경찰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모두 처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다(Mazerolle et al., 2012). 미국 Chicago는 무작위 배정을 통하여 QIP(Quality Interaction Training Program)라는 초임 경찰관의 대인관계, 감정조절 등 시민 응대 기술 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 이수 여부(처치)를 결정하고 처치-통제 집단 간 비교를 실시한 결과 경찰에 대한 존중과 신뢰, 지식 습득에 있어 경찰관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드러났으며(Schuck & Rosenbaum, 2011) 이후 경찰 조직 및 관련 조직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절차적 정당성 교육을 무작위로 실시하는 실험 연구를 통하여 장·단기적으로 절차적 정당성 교육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Skogan et al., 2015). 영국 역시 절차적 정당성 교육을 받은 경찰관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찰관에 비하여 피해자와의 라포(Rapport) 형성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Wheller et al., 2013).

최근 이러한 서구권에서 진행된 연구의 모형, 설문 문항, 변수들을 활용하여 아프리카 일부, 남아메리카, 아시아 등으로 연구가 확대되고 있다. Tankebe(2010)는 가나의 식민 지배 경험에서 착안하여 가나 경찰의 부패 또는 인권침해 등 전근대적 행태가 경찰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또한 논의를 확장하여 경찰 정당성 모형을 경찰관 개인, 경찰 조직, 더 나아가 민주주의와도 연결하고자 하였다. 현재 민주주의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을 조사하고 시민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절차적 요건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구하였다. 이를 통해 경찰 내부의 민주주의가 확보되어야 경찰들 역시 경찰 행위에서도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정리하며 내부적 민주주의가 외부적 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

했다. 한편 슬로베니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경찰에 대한 정당성 확보 및 경찰 협조에 영향을 미치며(Reisig et al., 2012) 중국(Sun et al., 2017), 홍콩(Cheng, 2017)에서도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면서 포스트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절차적 정당성 모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 모형에 관한 실증적 연구보다는 이론적, 탐색적 연구를 통해 담론을 형성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뤘으나(이영섭, 2017; 김가은 외, 2020) 최근 실증적인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류준혁(2015)의 경우 서울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절차적 공정성이 경찰 정당성과 시민의 경찰 지지, 도움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 경찰이 시민을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임창호(2021)의 경우 세종자치시를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조사를 통하여 절차적 공정성과 시민의 경찰 협력 의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서 법률 정당성 인식과 사회적 정체성 인식 등 두 변수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법률 정당성 인식과 사회적 정체성 인식 모두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어 경찰이 시민 협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때 법률 정당성 인식과 사회적 정체성 인식 수준을 함께 향상하고자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한편 장재성·최낙범(2021)은 전국 경찰 공무원이 교육받는 경찰인재개발원 연수생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참여, 중립성, 존중·대우, 신뢰로 구성된 절차적 공정성이 행정 대응성에 미치는 영향 및 경찰 재량권의 조절효과를 연구한 결과, 참여, 존중·대우, 신뢰는 행정 대응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중립성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재량권의 조절효과는 존중·대우, 중립성과 행정 대응성 사이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참여가 행정 대응성에 미치는 영향은 강화하고, 신뢰가 행정 대응성에 주는 영향은 감소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김다운(2022)은 절차적 공정성, 배분 공정성, 효과성, 법의 지배 원칙에 대한 동의 등 변수가 법원과 경찰 각각의 정당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법원과 경찰 모두 네 변수들이 정당성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맥락에서 진행된 경찰의 절차적 공정성과 효과성에 관한 실증적 선행연구들은 아래 [표 2-4]와 같다.

[표 2-5] 경찰의 정당성 이론에 관한 주요 실증적 선행연구 정리

연구자	분석대상	분석방법	종속변수	유의미한 독립변수
Sunshine, Tyler (2003)	미국 뉴욕 시민	구조방정식 (잠재변수분석)	empower police, cooperate police, comply with law	procedural fairness(+), police performance(+)
Tankebe (2013)	영국 런던 초임 경찰관	다변량 분석	obligation on cooperation with police	procedural fairness(+), distributive fairness(+), lawfulness(+), obligation to obey police(+)
Bradford, Quinton (2014)	영국 더럼 경찰관	구조방정식 (확인적 요인 분석)	commitment to democratic policing	leadership procedural fairness(+), distributive justice(+), public cooperation(+), public support(+), police protection(+)
Reisig et al. (2012)	슬로베니아 마리보, 류블랴나 고등학생	다중회귀분석	police cooperation police legitimacy	procedural justice(+), police effectiveness(+)
Mazerolle et al. (2012)	호주 퀸즐랜드 남부 지역 경찰	무작위 현장 실험	views on drunk-driving views of the police	fair(+), Express views(+), listened (+), dignity and respect(+), polite (+), trustworthy(+), confidence(+)
임창호 (2021)	전국 성인	다중회귀분석	경찰 협력	절차적 공정성(+), 법률 정당성(+), 사회적 정체성(+)
김다운 (2022)	전국 성인	다중회귀분석	경찰 정당성	절차공정성(+), 배분공정성(+), 효과성(+), 법의 지배지지(+)
박시영·최응렬 (2022)	한국 서울 시민	다중회귀분석	경찰 협력	경찰 정당성(+), 법 준수 의무감(-)
장재성·최낙범 (2022)	경찰인재개발원 교육생	다중회귀분석	행정 대응성	참여(+), 중립성(-), 존중·대우(+), 신뢰(+), 재량권(+)

제4절 경찰 신뢰에 대한 논의

1. 신뢰의 개념과 발전

신뢰의 사전적 정의는 ‘인간 혹은 사물의 질 또는 특성, 진술의 진실에 대한 확신’으로 정의된다. 신뢰는 복잡성이 크고 상호의존성이 강해지는 사회에서 개인이 적절히 기능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Tschannen-Moran & Hoy, 2000; Kasperson et al., 1992). 신뢰에 관한 초기 연구들은 신뢰를 기대 혹은 예측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단일한 개념으로 인식하고 연구하였으나(Gambetta, 1988; Zucker, 1986; Rotter, 1980), 최근 연구에서는 신뢰를 복잡한 개념들로 이루어진 다차원적 속성으로 이해하고 있다(Thomas, 1998; Rousseau et al., 1998; Frewer et al., 1996; 손호중·채원호, 2005). 사회과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신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의 세부적인 차원들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 이견이 존재한다.

이후 신뢰의 구성요소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었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신뢰는 정보(information), 영향력(influence), 타인에 대한 통제(control)로 구성된다. 따라서 신뢰가 없으면 타인들에게 정보를 감추거나 곡해하게 되고, 타인의 의견을 의심하기 때문에 협조를 거부하고 타인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Gibbs, 1964). Kasperson et al. (1992)은 신뢰는 몰입(commitment), 유능함(competence), 보살핌(caring),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후 Metlay(1999)는 이러한 네 가지 측면에 더해 신용(credibility)과 공정성(fairness)을 구성요소로 추가하였다.

이와 같이 신뢰에 대한 개념은 학자들마다 그 정의가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학자들이 신뢰가 행정이나 정책, 정부 기관에 대한 대중들의 협력이나 지지를 결정하는 핵심요소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Putnam, 2000; 김지수·심준섭, 2011). 특히 정부신뢰의 경우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의 탐색뿐만 아니라 정부신뢰를 통해 행정·정책에 미치는 변화를 관찰하는 시각도 있다(백승주·금현섭, 2010).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신뢰는 태도(attitude), 선호(preference), 지지(support)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이해된다(Chanley, 2000; Hetherington & Globetti, 2002; Rudolph & Evans, 2005; Rudolph, 2009).

2. 경찰 신뢰의 개념과 발전

초기 경찰 정당성 연구들은 경찰 신뢰를 정당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보고 연구를 진행하였다(Tyler, 1990; Tyler, 2003). 하지만 사회과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신뢰가 설명변수로서 역할을 한다는 연구가 등장하자 경찰 신뢰 역시 영향요인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전준하·조영일, 2022; 박재풍, 2012; 홍승표, 2020; Hough, 2010). 박재풍(2012)의 경우 절차적 공정성, 경찰신뢰, 경찰협력의사 간 관계를 검증하였다. 이때 경찰이 공정한 절차에 기반하여 시민을 응대할 때 시민들은 경찰에게 협력할 의무감을 더 많이 느낀다고 주장한다. 또한 경찰이 구현하는 윤리적 토대와 시민이 동등하다는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절차적 공정성이 경찰신뢰와 관계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게다가 경찰신뢰는 경찰에 대한 자발적인 순응과 협조에 대한 강한 예측인자임을 제시하면서 법적 냉소주의 또한 매개변수로 제시하였다(박재풍, 2012). 홍승표(2020)는 구조방정식을 통하여 절차적 공정성, 경찰신뢰, 경찰협력의사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때 절차적 공정성은 경찰신뢰 및 경찰협력의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경찰신뢰도 경찰협력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경찰이 공정한 절차에 기반하여 공정한 치안 유지 활동을 펼치면서 시민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시민들의 경찰협력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제5절 선행연구의 한계

절차적 공정성이나 효과성과 관련하여 최근 다양한 실증 연구들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한계가 있어 본 연구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국내 맥락에서의 연구가 부족하다. 현재까지 축적된 서구권의 절차적 정당성 연구들과 달리 비서구권의 제도적, 문화적 차이나 국가 발전 정도에 따라 경찰 정당성 이론이 얼마나 타당성을 가지며 일반화가 가능한지 많이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Hinds and Murphy, 2007; Reisig, Tankebe, and Mesko, 2012; Tankebe, 2009). 우리나라는 식민 지배에 의해 경찰이 강제로 설치된 역사적 맥락이 존재하여 서구권의 절차적 정당성 모형이 우리나라 맥락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박시영 · 최응렬, 2022). 특히 서구권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절차적 공정성과 효과성이 게다가 효과성 모형과 절차적 정당성 모형 중 어느 모형이 더 효과적인지 선행연구들의 의견이 여전히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Nagin & Telep, 2017)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모형이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지지 및 협력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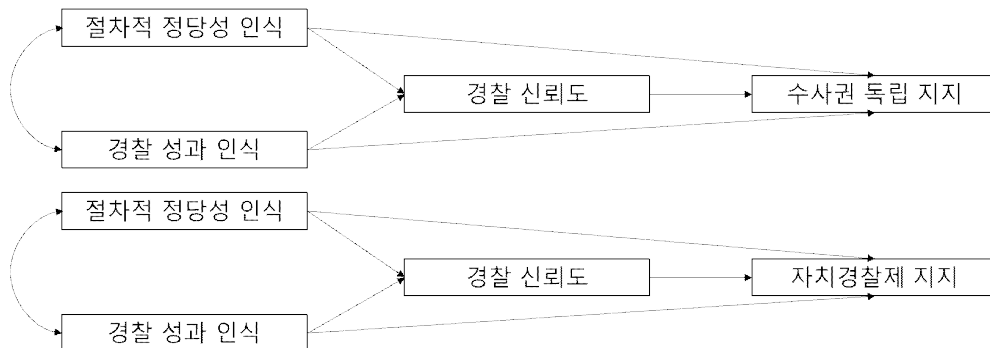
둘째, 세부 정책에 대한 지지도에 있어서 절차적 공정성 모형 혹은 효과성 모형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론적 측면이 아닌 정책 결정의 전략적 측면에서 주요 시책 지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절차적 공정성과 효과성이 기존의 연구들은 이론적 · 거시적 차원에서 포괄적인 변수(예: 시민 협력)를 분석하는 것이 주된 흐름이었다. 현재 경찰은 적극적으로 최우선순위로 추진하는 자치경찰제 및 수사권 독립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진행상황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는 특히 시민들이 경찰을 신뢰하지 못하는 요인들이 잔존한다는 것이다. 경찰의 무능력과 기강 해이가 시민의 신뢰를 붕괴시키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였다(김다운, 2022). 결국 일련의 행위들로 신뢰를 잃어버린 경찰이 최우선 과제인 자치경찰제와 수사권 독립을 완결짓기 위해서는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서 시민들이 자치경찰제와 수사권 독립이라는 세부 정책에 절차적 정당성 혹은 성과 중 어떠한 경찰의 가치에 따라 지지하는지 정책결정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제3장 연구 방법

제1절 연구모형

본 연구는 경찰의 절차적 정당성과 성과가 자치경찰제 및 수사권 독립의 지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종속변수는 자치경찰제 및 수사권 독립의 지지 여부를 측정한다. 경찰 성과, 경찰의 절차적 정당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한다. 매개변수로는 경찰 신뢰를 설정하였다. 아래 [그림 3-1]과 같은 연구모형을 중심으로 절차적 정당성과 성과가 자치경찰제와 수사권 독립에 미친 영향을 연구한다.

[그림 3-1] 연구모형



제2절 변수의 측정 및 연구가설

1. 표본

이 연구에 사용된 설문조사는 서울, 인천, 경기의 수도권에 거주하는 20-69세 사이의 한국 시민들의 표본을 통한 조사이다. 대한민국에는 2,6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인구(5,150만 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KOSIS, 2022). 한국에서는 지역마다 규모, 전통, 문화적 측면에서 본질

적으로 이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Ko, 2022), 지역적으로 유사한 경찰 활동의 경험을 공유하는 비교적 동질적인 지역에서 추출하였다. 2022년 3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가 승인한 연구 규약에 따라 참가자들에게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제공하고 2022년 4월에 설문조사를 완료하도록 하였다. 표본추출기법은 성별, 연령, 지역(시·도)를 계층으로 하여 층화 표본 추출을 실시하였다.

2.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경찰 수사권 독립과 자치경찰제에 대한 지지이다. 경찰 수사권 독립 및 자치경찰제에 대해 지지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독자적인 수사권이 부여된 사실’ 및 ‘자치경찰제도의 공식적 시행’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질문한 후 리커트 5점 척도에 의하여 ‘매우 반대’, ‘조금 반대’, ‘보통’, ‘조금 찬성’, ‘매우 찬성’ 중에서 값을 선택하도록 측정하였다.

3. 독립변수

1) 경찰 효과성에 대한 인식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경찰 효과성과 절차적 정당성이다. 우선 경찰 효과성은 경찰 활동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각 범죄 유형별로 경찰의 대응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질문하고 리커트 5점 척도(0=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1=효과적이지 않다, 2=보통이다, 3=효과적이다, 4=매우 효과적이다)에 따라 응답하도록 하였다. 범죄 유형에는 강력 범죄(예: 살인, 강도), 재산 범죄(예: 절도), 아동 학대(예: 신체 및 정서적 학대), 학교폭력(예: 괴롭힘), 성범죄(예: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예: 불법 촬영), 온라인 사기(예: 보이스피싱), 사이버 범죄(예: 해킹)가 해당된다. 독립변수인 경찰 효과성에 대한 인식과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동일차원의 개념을 측정하는 반복적인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설문 문항 간의 내적 일관성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는 전체 문항의 분산에 비하여 문항이 공유하는 분산의 비율을 구하여 내적 일관성을 측정한다. 크론바흐 알파는 0.7 이상이면 내적 일관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고길곤, 2019). 경찰 효과성 인식의 Cronbach- α 는 0.942로 드

러나 경찰 효과성 인식의 내적 일관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1-1]

경찰 효과성 인식은 경찰 수사권 독립 지지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경찰 효과성 인식은 자치경찰제도 지지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

다음으로 절차적 정당성은 범죄 예방과 통제를 위한 경찰의 활동이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공정한가에 관한 인식을 측정하였다. 이는 각 범주에 대하여 경찰이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공정하게 결정 및 집행하는 정도를 리커트 5점 척도(0=전혀 공정하지 않다, 1=공정하지 않다, 2=보통이다, 3=공정하다, 4=매우 공정하다)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죄 유형에는 강력 범죄(예: 살인, 강도), 재산 범죄(예: 절도), 아동 학대(예: 신체 및 정서적 학대), 학교폭력(예: 괴롭힘), 성범죄(예: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예: 불법 촬영), 온라인 사기(예: 보이스피싱), 사이버 범죄(예: 해킹)가 해당된다. Cronbach- α 는 0.946으로 절차적 공정성 인식은 내적 일관성이 크게 나타났다.

[가설 2-1]

절차적 공정성 인식은 경찰 수사권 독립 지지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절차적 공정성 인식은 자치경찰제도 지지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매개변수

매개변수로는 경찰 신뢰를 측정하였다. 경찰에 대한 시민의 신뢰 인식은 가장 이론적이고 정책적인 매개변수로서 응답자들에게 경찰이 ‘국민의 요청에 신속하게 응할 것’, ‘범죄수사를 잘할 것’, ‘수사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 ‘최근 정책 구상을 잘 수행한다’, ‘직무 수행 중 정직하다’, ‘시민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한다’, ‘지역사회를 위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에 성실하다’,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를 질문함으로써 측정되었다. 이 항목들은 인식된 경찰의 역량, 정직성, 자비심 등 다양한 신뢰 원인을 측정한다(Grimmelikhuijsen & Meijer, 2014). 응답자 전체의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동일한 5점 리커트 척도(0=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동의하지 않

는다, 2=보통이다, 3=동의한다, 4=매우 동의한다)로 측정되었다. 해당 개별 설문 항목 값들의 평균이 구성개념의 측정값이 된다. 경찰 신뢰의 Cronbach- α 값은 0.946으로 나와 경찰 신뢰의 내적 일관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설 3-1]

경찰 효과성 인식은 경찰 신뢰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절차적 공정성 인식은 경찰 신뢰는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1]

경찰 신뢰는 경찰 수사권 독립 지지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2]

경찰 신뢰와 자치경찰제에 대한 지지는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통제변수

1) 처벌의 확실성과 엄중성에 대한 인식

통제변수는 처벌의 확실성과 엄중성에 대한 인식이다. 응답자의 확실성과 엄중성 인식 수준은 개인적 이익뿐만 아니라 이타적이고 자애로운 이유에서 다른 사람의 복지에 도움이 되는 이타적 이익에 대한 인식이 시민의 이해타산적 또는 규범적으로 동기 부여되어,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응답자들은 강력범죄(예: 살인, 강도), 재산범죄(예: 절도), 아동학대(예: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 학교폭력(예: 괴롭힘), 신체적 성범죄(예: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예: 불법촬영), 온라인 사기(예: 보이스피싱), 사이버 범죄(예: 해킹), 음주운전, 중대재해(예: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피해자 보호 조치 위반(예: 접근금지 위반) 등의 범죄에 대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가해자가 경찰에 검거될 가능성(확실성)과 현재 처벌이 얼마나 엄중한지(처벌 강도) 5점 리커트 척도(1=매우 낮음, 2=낮음, 3=중립, 4=높음, 5=매우 높음)에 응답하도록 하는 질문에 의하여 측정되었다. 해당 개별 설문 항목 값들의 평균이 구성개념의 측정값이 된다.

2) 범죄 피해 경험

범죄 피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경찰 활동을 다르게 여길 수 있기 때문에(Berthelot, McNeal, and Baldwin, 2018; Callan and Rosenberger, 2011; Skogan, 2009) 당사자가 직접 경험한 범죄 피해 경험을 이항변수(0=아니

오, 1=예)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가족, 친구 등과 같이 주변인이 겪은 간접 범죄 피해 경험 역시 이항변수로 측정하였다.

3) 인구사회학적 변수

모수 추정치의 편의를 줄이기 위해서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예: 성별, 연령) 역시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먼저 성별은 남성이 기준이 되는 이항변수(0=아니오, 1=예)로 코딩하였다. 성별의 경우 여성일수록 경찰 신뢰가 높은 결과 나타나거나(유영현·신성식, 2008; 류준혁, 2012; 장현석, 2014a), 남성일수록 경찰 신뢰가 높다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Correia et al., 1996). 교육 수준의 경우에도 경찰 신뢰와 연구마다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어(장현석, 2014b; 장재성, 2021) 통제변수로 모형에 포함하였다. 혼인의 경우 ‘미혼’ 및 ‘이혼/사별’ 변수(0=아니오, 1=예)로 측정되었다. 정치 성향은 보수, 진보를 기준으로 리커트 5점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정치 성향은 경찰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이병도, 2017), 정책 지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금현섭·백승주, 2010)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종교는 개신교, 천주교, 불교, 기타 종교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연령은 연속형 변수로 20세 이상 70세 미만의 범위에서 5개 구간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경찰 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Correia et al., 1996; 류준혁, 2012; 황의갑 2013; 장현석, 2014a; 장현석·김소희, 2015) 이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띄는 것으로 여겨진다(표정환, 2017). 연 소득은 10개의 서열형 변수(예: 1=200만원 미만, 2=200만원~299만원, 3=300만원~399만원 등)로 측정되었다. 소득 역시 경찰신뢰와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고 보고한 연구들과(조상현·최재용, 2015; 표정환, 2017; 전수민·전용재, 2021),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연구가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장현석, 2014a; 이용일·장현석, 2020).

제3절 연구문제

위 논의들을 토대로 살펴보면, 경찰 활동에서 비롯되는 절차적 공정성 혹은 효과성이 정책 지지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정책에 대한 지지도를 이러한 절차적 공정성이나 효과성과 연관지어 살펴본 체계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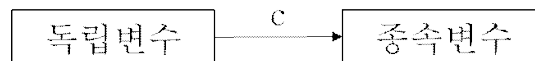
분석과 논의는 부족하다. 또한 우리나라 맥락에서 절차적 공정성과 효과성 중에서 실제 경찰 활동과 치안 정책에 대하여 어떤 요인이 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실증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절차적 공정성 인식 또는 효과성 인식이 자치경찰제도 및 경찰 수사권 독립 정책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 연구는 선행연구에 기반한 절차적 공정성 인식, 효과성 인식을 비롯한 주요 변수들과 관련한 설문 문항을 측정된 자료를 토대로 매개변수인 경찰 신뢰와 함께 분석하여 절차적 공정성 인식과 효과성 인식의 유의미함을 분석하였다. 둘째, ‘국내 맥락에서 시민들의 절차적 공정성 인식과 효과성 인식 중에서 어떠한 요인이 조직이 수행하는 최우선 주요 시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인가?’ 본 연구는 절차적 공정성과 성과 중에서 어떠한 요인이 자치경찰제와 수사권 독립에 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어떠한 요인이 더 주요한 변수인지를 분석하였다.

제4절 분석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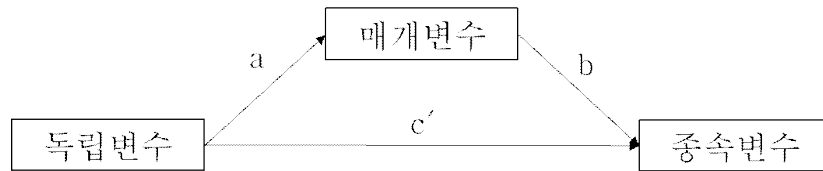
분석기법으로는 우선 통제변수를 포함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들 간의 관계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Baron & Kenny(1986)에서 체계화한 매개효과 모형을 토대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매개효과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림 3-2]와 같이 매개변수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그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한다. 이는 매개효과 모형에서 총효과(total effect)를 의미한다(c).

[그림 3-2] 총효과 모형



둘째, [그림 3-3]의 모형과 같이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그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여야 한다(a). 셋째, 매개변수를 고려할 때,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한다(b). 이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c')가 직접효과를 의미한다.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할 경우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부분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림 3-3] 매개효과 모형



또한 첫 번째 절차에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효과(a)와 세 번째 절차에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b)의 곱(ab)이 간접효과를 의미한다. 간접효과를 구하는 방법에는 곱 방법과 차이 방법이 있는데 그 중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곱 방법이므로(고길곤, 2021) 본 연구에서도 곱 방법을 활용하였다. 한편,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경우 첫 번째와 두 번째 절차는 모두 충족하는데 세 번째 절차에서 매개변수를 모형에 추가하여 분석할 경우 독립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분석 결과가 나온다. 이 경우 모형의 총효과는 직접효과에 의해 설명되는 것이 아닌 매개효과에 의해서만 설명이 된다.

다만 단순히 다중회귀분석 모형에서 p-value를 통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는 것은 많은 비판이 따르므로(고길곤, 2019),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며 1종 오류를 최대한 통제할 수 있다고 알려진 Sobel 검정을 추가로 실시하였다(Baron & Kenny, 1986; sobel, 1986). Hayes(2013)는 첫째, 총 효과 c가 0이더라도 매개효과가 존재할 수 있고 둘째, a와 b 개별적인 두 가설 검정의 결과가 기각되지 않더라도 두 가설이 결합된 경우 가설검정 결과가 기각될 수 있다. 즉, a와 b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통계적으로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고, a와 b가 통계적으로 존재하더라도 매개효과가 없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 때문에 추정된 매개효과인 ab가 유의미한지 검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고길곤, 2019; Sobel, 1986) 이를 Sobel 검정법으로 검증하였다. 매개효과 분석은 단순히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 존재 확인에 그치지 않고 독립변수가 어떠한 경로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인과적 경로 메커니즘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다양한 행정학·사회과학 연구에서 활용되어 왔다(고길곤, 2021; 정선호·서동기, 2016).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매개변수를 포함한 독립변수의 직·간접적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매개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통계 패키지는 STATA 버전 17.0 SE를 사용하였다.

제4장 분석 결과

제1절 기술통계분석 결과

위에서 설명한 연구모형, 변수를 토대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을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남성이 49.85%, 여성이 50.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녀 각각 50%에 가깝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본의 평균 연령은 44.56세로 측정되었고 범위는 앞서 언급하였듯 20-69세에 해당된다. 범죄 피해 경험 여부를 통제변수로 포함하기 위해서는 표본 내에 피해 경험이 있는 관측치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데이터에는 전체 표본 관측치의 약 43%가 범죄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결혼, 교육 수준, 소득, 정치 성향 등 경제·사회학적 변수들에 관한 기술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결혼 여부에 관한 변수의 경우 전체 표본 1,621명 중에서 63.73%인 1,033명이 결혼하였으며 36.27%인 588명이 미혼으로 측정되었다. 이혼 또는 사별 변수는 전체 1,621명 중에서 4.01%인 65명이 이혼 또는 사별하였으며 95.99%인 1,556명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 수준을 나타내는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대학교를 졸업한 인원은 1,193명으로 전체 73.60%를 차지하였고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인원은 428명으로 26.40%를 차지하였다. 대학원(이상) 학력 변수의 경우 전체 중 10.73%인 174명이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졌고 89.27%인 1,447명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 변수는 월 평균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200만원 이하부터 1000만원 이상까지 100만원 단위로 총 10개 구간으로 측정하였을 때, 평균은 4.81로 400~499만원 구간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치성향에 관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우선 보수의 경우 전체 중에서 24.61%인 399명이 보수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진보를 살펴보면 전체 표본 중에서 20.05%인 325명이 진보라고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종교 변수를 보면 전체 중 21.90%의 355명이 개신교라고 응답하였으며, 10.98%인 178명이 천주교로 응답하였고, 9.13%인 148명이 불교라고 응답하였다. 그 외 기타 종교는 0.68%인 11명이 기타라고 응답하였다.

셋째,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 주요 통제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절차적 공정성 인식은 평균이 2.6281로 이는 각 범죄별 경찰의 활

동이 얼마나 공정하게 집행·결정되었는지에 관한 응답들의 평균이 2.6281이며 ‘공정하지 않다.’ 라는 응답에 가까운 것을 의미한다. 표본들은 평균적으로 경찰의 절차적 공정성에 대하여 대체로 효과적이지 않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독립변수인 효과성에 대한 인식의 경우 평균치가 2.7117로 절차적 공정성 인식과 마찬가지로 각 범죄별 경찰 활동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에 관한 응답이 평균적으로 ‘효과적이지 않다.’ 라는 응답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속변수인 경찰 수사권 독립 지지의 경우 평균이 3.0080로 평균적으로 ‘보통’ 정도로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표본 관측치는 다른 종속변수인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관해서도 평균 3.16으로 ‘보통’ 정도로 지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매개변수인 경찰 신뢰는 평균 2.81로 나타나 표본들이 평균적으로 경찰을 신뢰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경찰·범죄 관련 주요 통제변수에 관한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처벌의 확실성과 엄중성에 관한 인식의 경우 처벌의 확실성은 평균 3.0686으로 평균적으로 ‘보통이다’ 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처벌의 엄중성의 경우 평균 2.0869로 대체로 처벌의 강도가 ‘다소 낮다’ 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피해 경험 여부 변수의 경우 43.24%인 701명이 범죄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기술통계분석 결과

구 분	변 수		개 수	평 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변수	경찰 수사권 독립 지지		1,621	3.0080	1.2573	1	5
	자치경찰제도 지지			3.1604	0.9964	1	5
독립변수	절차적 공정성 인식			2.6281	0.8239	1	5
	효과성 인식			2.7117	0.8510	1	5
매개변수	경찰 신뢰			2.8105	0.8595	1	5
통계변수	처벌에 대한 인식	확실성		3.0686	0.8324	0	1
		엄중성		2.0869	0.8420	0	1
	범죄 피해 경험			0.4324	0.4956	0	1
	연령			44.5638	13.2952	20	69
	성별(남성)			0.4985	0.5002	0	1
	혼인	미혼		0.3627	0.4809	0	1
		이혼 또는 사별		0.0401	0.1963	0	1
	학력	대학 졸업		0.7360	0.4410	0	1
		대학원 재학 이상		0.1073	0.3096	0	1
	소득 수준		4.8168	2.5321	1	10	
	정치 성향	보수	0.2461	0.4309	0	1	
		진보	0.2005	0.4005	0	1	
	종교	개신교	0.2190	0.4137	0	1	
		천주교	0.1098	0.3127	0	1	
		불교	0.9130	0.2881	0	1	
		기타 종교	0.0067	0.0821	0	1	

제2절 상관관계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활용된 종속변수, 독립변수, 매개변수, 통제변수들을 중심으로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살펴보면 [표]과 같다. 경찰 수사권 독립과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는 종속변수의 경우 먼저 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한 지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경찰 신뢰(0.4048, $p < 0.001$), 진보 정치 성향(0.0993, $p < 0.001$), 처벌의 확실성(0.0944, $p < 0.001$), 절차적 공정성 인식(0.1534, $p < 0.001$), 효과성 인식(0.1748, $p < 0.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양(+)의 방향으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경찰신뢰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반면, 미혼 여부(-0.0548, $p < 0.05$), 대학원 이상의 학력 여부(-0.0498, $p < 0.05$), 보수 정치 성향(-0.2463, $p < 0.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음(-)의 방향으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대한 지지와 관련한 종속변수를 살펴보면 경찰 신뢰(0.3916, $p < 0.001$), 연령(0.1020, $p < 0.001$), 진보 정치 성향(0.2519, $p < 0.001$), 처벌의 확실성(0.1527, $p < 0.001$), 처벌의 엄중성(0.0743, $p < 0.01$), 절차적 공정성 인식(0.2329, $p < 0.001$), 효과성 인식(0.2371, $p < 0.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양(+)의 방향으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미혼 여부(-0.0931, $p < 0.001$), 보수 정치 성향(-0.1495, $p < 0.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마찬가지로 경찰 신뢰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독립변수의 경우, 절차적 공정성 인식은 종속변수 외에도 경찰 신뢰(0.6418, $p < 0.001$), 연령(0.996, $p < 0.001$), 개신교(0.550, $p < 0.05$), 처벌의 확실성(0.4559, $p < 0.001$), 처벌의 엄중성(0.5769, $p < 0.001$), 효과성 인식(0.7231, $p < 0.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효과성 인식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에, 미혼 여부(-0.0844, $p < 0.001$), 범죄 피해 경험(-0.0839, $p < 0.001$)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효과성 인식의 경우, 경찰 신뢰(0.5937, $p < 0.001$), 불교(0.0550, $p < 0.05$), 처벌의 확실성(0.4959, $p < 0.001$), 처벌의 엄중성(0.5144, $p < 0.001$)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범죄 피해 경험(-0.1521, $p < 0.001$)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인 경찰 신뢰의 경우, 연령(0.0922, $p < 0.001$), 진보 정치 성향(0.0993, $p < 0.001$), 처벌의 확실성(0.3693, $p < 0.001$), 처벌의 엄중성(0.3559, $p < 0.001$)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미혼 여부(-0.1054, $p < 0.001$), 보수 정치 성향(-0.0823, $p < 0.001$), 범죄 피해 경험(-0.0643, $p < 0.01$)은 음(-)의 상관관계

가 나타났다. 다만 이 경우 처벌의 확실성과 엄중성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긴 하였으나 아주 강한 상관관계가 드러나지는 않았다.

한편, 주요 통제변수의 경우도 살펴보면 우선 처벌의 확실성의 경우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 외에 보수 정치 성향(0.0549, $p < 0.05$), 불교(0.0499, $p < 0.05$) 처벌의 엄중성(0.4095, $p < 0.001$)과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처벌의 엄중성은 성별(0.0845, $p < 0.001$), 불교(0.0607, $p < 0.05$)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범죄 피해 경험의 경우 성별(0.0861, $p < 0.001$), 진보 정치 성향(0.0698, $p < 0.05$)과 양(+)의 상관관계를 처벌의 확실성(-0.0554, $p < 0.05$)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연구에 활용된 변수들의 상관관계는 아래 <표 >와 같다.

[표 4-2] 상관관계분석 결과

변수	경찰 신뢰	수사권 독립 지지	자치경찰제 지지	연령	성별(남성)	미혼	이혼 또는 사별
경찰 신뢰	1.0000						
수사권 독립 지지	0.4048***	1.0000					
자치경찰제 지지	0.3916***	0.6287**	1.0000				
연령	0.0922***	0.0398	0.1020***	1.0000			
성별(남성)	-0.0079	-0.0054	-0.0280	0.0092	1.0000		
미혼	-0.1054***	-0.0548*	-0.0931***	-0.6382***	-0.0079	1.0000	
이혼 또는 사별	0.0370	-0.0013	0.0176	0.1662***	-0.0465	-0.1542***	1.0000
대학 졸업	-0.0171	0.0216	0.0037	-0.1901***	0.0597*	0.1172***	-0.1272***
대학원 재학 이상	-0.0061	-0.0498*	-0.0398	0.0991***	0.0848***	-0.1000***	0.0510*
소득 수준	0.0194	0.0030	0.0200	0.0320	0.0605*	-0.1699***	-0.1206***
보수 성향	-0.0823***	-0.2463***	-0.1495***	0.1232***	0.0318	-0.0826***	-0.0073
진보 성향	0.0993***	0.2763***	0.2519***	0.0172	0.0462	0.0036	-0.0081
개신교	0.0484	-0.0342	0.0121	0.0554*	-0.0446	-0.0893***	0.0134
천주교	-0.0052	0.0166	0.0088	0.0895***	0.0129	-0.0680**	0.0087
불교	0.0285	-0.0378	-0.0059	0.1192***	0.0053	-0.0921***	0.0444
기타 종교	-0.0028	0.0114	0.0093	-0.0205	0.0223	0.0158	-0.0169
처벌 확실성	0.3693***	0.0944***	0.1527***	0.0134	0.0283	-0.0043	0.0175
처벌 엄중성	0.3559***	0.0155	0.0743**	0.0099	0.0845***	-0.0056	0.0064
효과성	0.5937***	0.1748***	0.2371***	0.0459	-0.0216	-0.0548*	0.0283
절차적 공정성	0.6416***	0.1534***	0.2329***	0.0996***	0.0405	-0.0844***	0.0211
범죄 피해 경험	-0.0643**	0.0271	0.0145	-0.0182	0.0861***	0.0096	-0.0261

* $p < 0.05$, ** $p < 0.01$, *** $p < 0.001$

변수	대학 졸업	대학원 재학 이상	소득 수준	보수 성향	진보 성향	개신교	천주교
대학 졸업	1.0000						
대학원 재학 이상	-0.5789***	1.0000					
소득 수준	0.0457	0.1802***	1.0000				
보수 성향	-0.1061***	0.0748**	-0.0096	1.0000			
진보 성향	0.0133	0.0055	0.0302	-0.2861***	1.0000		
개신교	-0.0077	0.0477	0.0289	0.0818***	0.0180	1.0000	
천주교	-0.0269	0.0503*	0.0200	0.0375	-0.0132	-0.1860***	1.0000
불교	-0.0288	0.0146	0.0229	0.0526*	0.0178	-0.1679***	-0.1113***
기타 종교	-0.0187	0.0442	-0.0237	0.0225	-0.0039	-0.0438	-0.0290
처벌 확실성	-0.0302	-0.0049	0.0003	-0.0124	0.0233	0.0549*	-0.0359
처벌 엄중성	0.0062	0.0137	-0.0073	0.0343	-0.0407	0.0321	-0.0049
효과성	-0.0543*	-0.0094	0.0167	-0.0222	0.0487	0.0415	-0.0406
절차적 공정성	-0.0309	0.0103	0.0094	0.0204	0.0142	0.0550*	-0.0252
범죄 피해 경험	-0.0111	0.0473	0.0445	-0.0045	0.0698*	0.0165	0.0280

* $p < 0.05$, ** $p < 0.01$, *** $p < 0.001$

변수	불교	기타 종교	차별 확실성	차별 엄중성	효과성	절차적 공정성	범죄 피해 경험
불교	1.0000						
기타 종교	-0.0262	1.0000					
차별 확실성	0.0499*	0.0318	1.0000				
차별 엄중성	0.0607*	0.0312	0.4095***	1.0000			
효과성	0.0518*	-0.0041	0.4959***	0.5144***	1.0000		
절차적 공정성	0.0462	0.0257	0.4559***	0.5769***	0.7231***	1.0000	
범죄 피해 경험	0.0389	0.03400	-0.0554*	-0.0481	-0.1521***	-0.0839***	1.0000

* $p < 0.05$, ** $p < 0.01$, *** $p < 0.001$

제3절 매개효과 분석 결과

1. 다중공선성 검정

우선 절차적 공정성 인식, 효과성 인식이 경찰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때 다중회귀분석에서는 절차적 공정성 인식과 효과성 인식이 독립변수로 경찰 신뢰가 종속변수가 되며 앞서 제시한 통제변수 역시 모형에 포함되었다. 회귀분석을 진행하기 전에 다중공선성 분석을 통하여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다중공선성은 독립변수들이 동일한 개념을 측정할 경우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Alin, 2010). 이 경우 한 독립변수의 변화가 또 다른 독립변수의 변화를 야기하여 다른 변수가 일정할 때 원인과 결과 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게다가 여러 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이 크게 나타날 경우 각각의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를 고유하게 설명하는 바를 확정하기 어렵게 된다. 다중공선성을 진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 허용도의 역수인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통해 진단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고길곤, 2019). 독립변수 X_j 에 대하여 다른 독립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회귀모형을 분석할 경우 R_j^2 값을 1에서 제하면 허용도를 구할 수 있다. 즉 허용도는 $1-R_j^2$ 이며 이를 역수로 취한 것이 분산팽창계수이다.

$$VIF = \frac{1}{1 - R_j^2}$$

분산팽창계수의 제곱근은 회귀계수 표준오차의 팽창 정도를 뜻한다. 따라서 다중공선성이 크게 나타나 분산팽창계수가 클 경우 회귀계수의 표준오차가 커지고, 이는 회귀계수 추정치의 신뢰구간이 더 넓어지고 t 검정값이 작아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다중공선성이 클 경우 추정치의 신뢰성(reliability)이 낮아지고 독립변수의 추가나 제거를 통한 모형 설정 과정에서 회귀계수의 민감한 변화를 초래하므로 회귀분석 전에 다중공선성을 점검하고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연구에서 실시한 각 모형별로 다중공선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표 >, <표 >, <표 >, <표 >와 같다. 모든 독립변수들의 분산팽창계수 값이 10($1/VIF$ 값 0.1)을 넘지 않고, 분산팽창계수들의 평균은 1.48이며 가장 높은 분산팽창계수 값을 가지는 설명변수인 절차적 공정성의 분산팽창계수가 2.85로 본 모형에서는 회귀계수와 표준오차 해석에 있어 다중공선성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단순히 분산팽창계수의 수치를 통한 다중공선성 문제의 발생여부를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

라 설문조사와 연구방법론의 개념적 측면에서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사용된 설문조사의 응답 데이터가 중복된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 응답 데이터를 토대로 분산팽창계수를 살펴본 결과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설문 문항이 중복된 개념을 질문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표 4-3] 다중공선성 검정 결과

변수	다중공선성 (VIF)	1/VIF
절차적 공정성	2.85	0.3512
효과성	2.52	0.3968
경찰 신뢰	1.87	0.5338
연령	1.80	0.5566
미혼	1.79	0.5591
대학 졸업	1.67	0.5999
대학원 재학 이상	1.66	0.6008
처벌의 엄중성	1.63	0.6134
처벌의 확실성	1.41	0.7075
보수 정치 성향	1.15	0.8691
소득 수준	1.14	0.8782
개신교	1.13	0.8872
진보 정치 성향	1.12	0.8919
불교	1.10	0.9123
천주교	1.09	0.9181
이혼 또는 사별	1.07	0.9358
성별(남성)	1.06	0.9446
범죄 피해 경험	1.05	0.9536
기타 종교	1.02	0.9837
다중공선성 (VIF) 평균	1.48	

2. 매개변수인 경찰 신뢰 회귀분석 결과

매개변수인 경찰 신뢰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아래 <표 >와 같다. 먼저 미혼의 경우 회귀계수가 -0.0916으로 혼인한 사람들에 비하여 경찰을 신뢰할 확률이 적었다($p < 0.05$). 보수 정치 성향의 사람들도 다른 정치 성향에 비하여 회귀계수가 -0.1425로 경찰을 신뢰할 확률이 적었다($p < 0.001$). 처벌의 엄중성 역시 회귀계수가 -0.0600으로 계수 크기는 작지만 처벌이 엄중성 인식이 클수록 경찰을 신뢰하게 될 확률이 적었다($p < 0.05$). 한편 진보 정치 성향의 경우 그렇지 않은 성향에 비하여 회귀계수가 0.1206으로 경찰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또한 처벌의 확실성 인식도 회귀계수가 0.0562로 계수 크기가 크지는 않지만 처벌이 확실하다고 인식할수록 경찰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주요 독립변수인 효과성 인식은 회귀계수가 0.2602이고($p < 0.001$), 절차적 공정성 인식은 회귀계수가 0.4821로($p < 0.001$) 효과성 인식과 절차적 공정성 인식이 높을수록 경찰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절차적 공정성 인식의 계수 크기가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효과성 인식의 계수 크기가 크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다만 주요 통제변수 중 하나인 범죄 피해 경험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그밖의 연령, 성별, 이혼 및 사별, 대졸 학력, 대학원 이상 학력, 소득 수준, 개신교, 천주교, 불교, 기타 종교 등 통제변수 역시 모두 $p <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4-4] 매개변수인 경찰 신뢰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구분	Coef.	S.E.	t	표준화 Coef.
효과성	0.2602***	0.0285	9.12	0.2577
절차적 공정성	0.4821***	0.0298	16.18	0.4621
연령	0.0006*	0.0016	0.36	0.0088
남성	-0.0340	0.0323	-1.05	-0.0198
미혼	-0.0916	0.0436	-2.10	-0.0513
이혼 또는사별	0.0480	0.0826	0.58	0.0110
대학 졸업	0.0308	0.0459	0.67	0.0158
대학원 재학 이상	0.0014	0.0654	0.02	0.0005
소득 수준	-0.0003	0.0066	-0.04	-0.0008
보수 성향	-0.1425**	0.0389	-3.66	-0.0714
진보 성향	0.1206**	0.0414	2.92	0.0562
개신교	0.0253	0.0403	0.63	0.0122
천주교	0.0533	0.0523	1.02	0.0194
불교	-0.0142	0.0570	-0.25	-0.0048
기타 종교	-0.1058	0.1926	-0.55	-0.0101
범죄 피해 경험	0.0213	0.0324	0.66	0.0123
처벌의 확실성	0.0562**	0.0224	2.51	0.0545
처벌의 엄중성	-0.0600*	0.0237	-2.53	-0.0588
상수	0.7840	0.1206	6.50	.
R ²		0.4666		
Adj. R ²		0.4602		
F(sig)		77.73***		
N		1,621		

* $p < 0.05$, ** $p < 0.01$, *** $p < 0.001$

3. 경찰 수사권 독립 지지 회귀분석 결과(매개변수 미포함)

매개변수가 모형 내에 포함되지 않은 경찰 수사권 독립 지지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아래 <표 >와 같다. 먼저 보수 정치 성향의 경우 회귀계수가 -0.5269로 다른 정치 성향에 비하여 경찰 수사권 독립을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p < 0.001$). 또한 불교 신자 역시 회귀계수가 -0.2240으로 다른 종교나 무종교에 비하여 경찰 수사권 독립을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반면 진보 정치 성향일 경우 중도 성향이나 보수 성향에 비해 회귀계수는 0.6648로 경찰 수사권 독립을 지지할 가능성이 크게 나타났다($p < 0.001$). 주요 독립변수들을 살펴보면, 효과성 인식은 회귀계수가 0.1894이고(표준화 회귀계수 0.1282)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p < 0.001$), 절차적 공정성 인식은 회귀계수가 0.1736으로(표준화 회귀계수 0.1137) 유의하게 나타났다($p < 0.01$). 그러나 주요 통제변수인 범죄 피해 경험은 본 모형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처벌의 확실성 인식을 비롯한 연령, 성별, 혼인 상태, 교육 수준, 소득 수준, 불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 및 무종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5] 경찰 수사권 독립 지지 다중회귀분석 결과(매개변수 미포함)

구분	Coef.	S.E.	t	표준화 Coef.
효과성	0.1894***	0.0525	3.61	0.1282
절차적 공정성	0.1736**	0.0549	3.16	0.1137
연령	0.0018	0.0029	0.61	0.0188
남성	-0.0120	0.0594	-0.20	-0.0048
미혼	-0.1531	0.0802	-1.91	-0.0586
이혼 또는사별	-0.0957	0.1522	-0.63	-0.0149
대학 졸업	-0.0150	0.0846	-0.18	-0.0053
대학원 재학 이상	-0.1786	0.1204	-1.48	-0.0440
소득 수준	-0.0062	0.0122	-0.51	-0.0125
보수 성향	-0.5269***	0.0716	-7.36	-0.1806
진보 성향	0.6649***	0.0762	8.73	0.2118
개신교	-0.1278	0.0741	-1.72	-0.0420
천주교	0.0686	0.0964	0.71	0.0171
불교	-0.2240*	0.1050	-2.13	-0.0513
기타 종교	0.2275	0.3547	0.64	0.0149
범죄 피해 경험	0.1065	0.0597	1.78	0.0420
처벌의 확실성	0.0316	0.0412	0.77	0.0209
처벌의 엄중성	-0.1541***	0.0437	-3.52	-0.1032
상수	2.2986	0.2221	10.35	.
R ²		0.1542		
Adj. R ²		0.1447		
F(sig)		16.23***		
N		1,621		

* $p < 0.05$, ** $p < 0.01$, *** $p < 0.001$

4. 경찰 수사권 독립 지지 회귀분석 결과(매개변수 포함)

매개변수를 독립변수로 포함하고 경찰 수사권 독립 지지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 회귀분석 결과는 아래 <표 >와 같다. 우선 보수 정치 성향은 회귀계수가 -0.4301로 다른 성향에 비해 경찰 수사권 독립을 지지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개신교를 믿는 경우 역시 회귀계수가 -0.1450으로 다른 종교 혹은 무종교에 비해 경찰 수사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p < 0.05$). 또한 불교의 경우에도 회귀계수가 -0.2143으로 경찰 수사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 < 0.05$). 처벌의 엄중성 인식도 회귀계수가 -0.1137로 처벌이 엄중하다고 인식할수록 경찰 수사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주요 변수인 효과성 인식의 경우 앞서 매개변수를 포함하지 않는 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매개변수를 포함한 본 모형에서는 $p <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절차적 공정성 인식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p < 0.01$) 회귀계수가 -0.1536으로(표준화 회귀계수 -0.1007) 절차적으로 공정하다고 인식할수록 경찰 수사권 독립 지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경찰 신뢰의 경우 회귀계수가 0.6786으로(표준화 회귀계수 0.4639) 매우 크게 나타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경찰을 신뢰할 경우 경찰 수사권 독립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따라서 효과성 인식의 경우 경찰 신뢰를 완전 매개하여 경찰 수사권 독립 지지에 영향을 미치고 절차적 공정성 인식의 경우 경찰 신뢰를 부분 매개하여 경찰 수사권 독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밖의 범죄 피해 경험과 처벌의 확실성 인식과 같은 주요 독립변수와 연령, 성별, 혼인 상태, 교육 수준, 소득 수준, 기타 종교 등 변수는 $p <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6] 경찰 수사권 독립 지지 다중회귀분석 결과(매개변수 포함)

구분	Coef.	S.E.	t	표준화 Coef.
경찰 신뢰	0.6786***	0.0428	15.86	0.4639
효과성	0.0128	0.0501	0.26	0.0087
절차적 공정성	-0.1536**	0.0550	-2.79	-0.1007
연령	0.0014	0.0027	0.51	0.0147
남성	0.0111	0.0553	0.20	0.0044
미혼	-0.0910	0.0747	-1.22	-0.0348
이혼 또는사별	-0.1283	0.1415	-0.91	-0.0200
대학 졸업	-0.0359	0.0787	-0.46	-0.0126
대학원 재학 이상	-0.1796	0.1119	-1.60	-0.0442
소득 수준	-0.0060	0.0113	-0.53	-0.0121
보수 성향	-0.4302***	0.0669	-6.43	-0.1474
진보 성향	0.5830***	0.0710	8.21	0.1857
개신교	-0.1450*	0.0689	-2.10	-0.0477
천주교	0.0324	0.0896	0.36	0.0081
불교	-0.2143*	0.0976	-2.20	-0.0491
기타 종교	0.2993	0.3298	0.91	0.0195
범죄 피해 경험	0.0921	0.0555	1.66	0.0363
처벌의 확실성	-0.0065	0.0384	-0.17	-0.0043
처벌의 엄중성	-0.1134**	0.0407	-2.78	-0.0759
상수	1.7665	0.2092	8.44	.
R ²		0.2691		
Adj. R ²		0.2605		
F(sig)		31.03***		
N		1,621		

* $p < 0.05$, ** $p < 0.01$, *** $p < 0.001$

5. 자치경찰제도 지지 회귀분석 결과(매개변수 미포함)

매개변수인 경찰 신뢰가 포함되지 않은 자치경찰제도 지지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보수 정치 성향의 경우 회귀계수가 -0.2130 으로 다른 정치 성향에 비하여 자치경찰제도 지지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처벌의 엄중성 인식도 회귀계수가 -0.1045 로 자치경찰제도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반면 진보 정치 성향의 경우 회귀계수가 0.5251 로 자치경찰제도 지지에 양(+)의 영향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미치며 계수 크기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또한 주요 변수의 경우 효과성 인식은 회귀계수가 0.1520 으로(표준화 회귀계수 0.1298) 자치경찰제도 지지에 양(+)의 영향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 < 0.001$). 절차적 공정성 인식 역시 회귀계수 0.1975 로(표준화 회귀계수 0.1633) 자치경찰제도 지지에 양(+)의 영향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따라서 그 밖의 범죄 피해 경험, 처벌의 확실성 등 핵심 변수들과 성별, 혼인 상태, 교육 수준, 소득 수준 등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모형의 회귀분석 결과표는 아래와 같다.

[표 4-7] 자치경찰제 지지 다중회귀분석 결과(매개변수 미포함)

구분	Coef.	S.E.	t	표준화 Coef.
효과성	0.1520***	0.0417	3.64	0.1298
절차적 공정성	0.1975***	0.0436	4.54	0.1633
연령	0.0051*	0.0023	2.19	0.0675
남성	-0.0667	0.0472	-1.41	-0.0335
미혼	-0.0921	0.0637	-1.45	-0.0445
이혼 또는사별	-0.0150	0.1208	-0.12	-0.0029
대학 졸업	-0.0045	0.0671	-0.07	-0.0020
대학원 재학 이상	-0.1482	0.0956	-1.55	-0.0461
소득 수준	0.0031	0.0097	0.32	0.0079
보수 성향	-0.2129***	0.0569	-3.74	-0.0921
진보 성향	0.5251***	0.0605	8.68	0.2110
개신교	-0.0190	0.0588	-0.32	-0.0079
천주교	0.0441	0.0765	0.58	0.0139
불교	-0.0984	0.0833	-1.18	-0.0285
기타 종교	0.1369	0.2816	0.49	0.0113
범죄 피해 경험	0.0762	0.0474	1.61	0.0379
처벌의 확실성	0.0570	0.0327	1.74	0.0476
처벌의 엄중성	-0.1045**	0.0347	-3.01	-0.0883
상수	2.0396	0.1763	11.57	.
R ²		0.1512		
Adj. R ²		0.1417		
F(sig)		15.86***		
N		1,621		

* $p < 0.05$, ** $p < 0.01$, *** $p < 0.001$

6. 자치경찰제도 지지 회귀분석 결과(매개변수 포함)

매개변수인 경찰 신뢰를 포함하고 자치경찰제도 지지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보수 정치 성향의 경우 회귀계수가 -0.155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자치경찰제도 지지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처벌의 엄중성도 회귀계수가 -0.08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자치경찰제도 지지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p < 0.05$). 한편 연령의 경우 회귀계수가 0.0048로 계수 크기는 작은 편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또한 진보 정치 성향의 경우 회귀계수가 0.4760으로 계수 크기도 큰 편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자치경찰제도 지지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 < 0.001$). 매개변수인 경찰 신뢰도 회귀계수가 0.4066으로 계수 크기가 큰 편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자치경찰제도 지지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 < 0.001$). 주요 변수인 효과성 인식의 경우 $p <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절차적 공정성 인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p <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자치경찰제도 지지를 종속변수로 할 때 효과성 인식과 절차적 공정성 인식은 경찰 신뢰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범죄 피해 경험과 처벌의 확실성 등 주요 변수들과 성별, 혼인 상태, 교육 수준, 소득 수준, 종교 등 변수들은 자치경찰제도 지지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모형의 회귀분석 결과표는 아래와 같다.

[표 4-8] 자치경찰제도 지지 다중회귀분석 결과(매개변수 포함)

구분	Coef.	S.E.	t	표준화 Coef.
경찰 신뢰	0.4066***	0.0351	11.59	0.3507
효과성	0.0462	0.0411	1.12	0.0395
절차적 공정성	0.0015	0.0451	0.03	0.0013
연령	0.0048*	0.0022	2.17	0.0645
남성	-0.0529	0.0453	-1.17	-0.0265
미혼	-0.0549	0.0613	-0.9	-0.0265
이혼 또는사별	-0.0345	0.1161	-0.3	-0.0068
대학 졸업	-0.0171	0.0645	-0.26	-0.0075
대학원 재학 이상	-0.1488	0.0918	-1.62	-0.0462
소득 수준	0.0032	0.0093	0.35	0.0082
보수 성향	-0.1550**	0.0549	-2.83	-0.0670
진보 성향	0.4760***	0.0583	8.17	0.1913
개신교	-0.0293	0.0566	-0.52	-0.0122
천주교	0.0225	0.0735	0.31	0.0071
불교	-0.0926	0.0801	-1.16	-0.0268
기타 종교	0.1799	0.2706	0.66	0.0148
범죄 피해 경험	0.0675	0.0455	1.48	0.0336
처벌의 확실성	0.0341	0.0315	1.08	0.0285
처벌의 엄중성	-0.0801	0.0334	-2.4	-0.0677
상수	1.7209	0.1716	10.03	.
R ²		0.2169		
Adj. R ²		0.2076		
F (sig)		23.34***		
N		1,621		

* $p < 0.05$, ** $p < 0.01$, *** $p < 0.001$

7. 매개효과 모형의 Sobel 검정 결과 및 종합

먼저, 경찰 수사권 독립 지지를 종속변수, 경찰신뢰를 매개변수로 하고 효과성, 절차적 공정성을 독립변수로 하는 모형의 Sobel 검정 결과는 아래 [표 4-9]와 같다. 효과성을 독립변수로 하는 모형의 경우 간접효과 ab의 표준화 회귀계수 값은 0.120으로 나타났으며 신뢰구간의 범위 안에 간접효과 참값이 포함되어 있고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제대로 추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간접효과 ab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에 반해 직접효과 c'은 표준화 회귀계수가 0.009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완전 매개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즉 경찰 효과성의 경우 경찰신뢰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경찰 수사권 독립 지지에는 그렇지 못했다.

한편, 절차적 공정성을 독립변수로 하는 경우 간접효과 ab의 표준화 회귀계수는 0.214이고 신뢰구간의 범위 안에 간접효과 참값이 포함되어 있고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제대로 추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간접효과 ab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직접효과 c'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부분 매개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9] 경찰 수사권 독립 지지 모형 Sobel 검정 결과

Sobel 검정 결과 및 표준화 회귀계수		
독립변수	경찰 효과성 인식	절차적 공정성 인식
간접 효과(ab)	0.120	0.214
표준오차(S.E.)	0.015	0.018
z-value	8.180	12.095
p-value	0.000	0.000
신뢰구간	0.091 , 0.148	0.180 , 0.249
a) 독립변수 → 매개변수	$\beta = 0.258^{***}$	$\beta = 0.462^{***}$
b) 매개변수 → 종속변수	$\beta = 0.464^{***}$	$\beta = 0.464^{***}$
c') 독립변수 → 종속변수	$\beta = 0.009$	$\beta = -0.101^{**}$

* $p < 0.05$, ** $p < 0.01$, *** $p < 0.001$

다음으로 자치경찰제도 지지를 종속변수로, 경찰신뢰를 매개변수로 하고 경찰 효과성, 절차적 공정성을 독립변수로 하는 Sobel 검정 결과는 아래 [표 4-10]과 같다. 효과성 인식을 독립변수로 하는 모형의 경우 간접효과 ab의 표준화 회귀계수 값은 0.120으로 나타났으며 신뢰구간의 범위 안에 간접효과 참값이 포함되어 있고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제대로 추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간접효과 ab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에 반해 직접효과 c'은 표준화 회귀계수가 0.039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완전 매개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즉 경찰 효과성 인식은 경찰 신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자치경찰제도 지지에는 그렇지 못했다.

한편, 절차적 공정성 인식을 독립변수로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간접효과 ab의 표준화 회귀계수는 0.162이고 신뢰구간의 범위 안에 간접효과 참값이 포함되어 있고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제대로 추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간접효과 ab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에 반해 직접효과 c'은 표준화 회귀계수가 0.001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완전 매개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즉 절차적 공정성 인식은 경찰신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자치경찰제도 지지에는 그렇지 못했다.

[표 4-10] 자치경찰제도 지지 모형 Sobel 검정 결과

Sobel 검정 결과 및 표준화 회귀계수		
독립변수	경찰 효과성 인식	절차적 공정성 인식
간접 효과(ab)	0.090	0.162
표준오차(S.E.)	0.012	0.016
z-value	7.360	9.860
p-value	0.000	0.000
신뢰구간	0.066 , 0.114	0.130 , 0.194
a) 독립변수 → 매개변수	$\beta = 0.258^{***}$	$\beta = 0.462^{***}$
b) 매개변수 → 종속변수	$\beta = 0.351^{***}$	$\beta = 0.351^{***}$
c') 독립변수 → 종속변수	$\beta = 0.039$	$\beta = 0.001$

* $p < 0.05$, ** $p < 0.01$, *** $p < 0.001$

이에 연구가설 채택 또는 기각 여부는 아래 [표 4-11]과 같다.

[표 4-11] 연구가설 채택 또는 기각 여부 정리

연구가설	채택/기각 여부
[가설 1-1] 경찰 효과성 인식은 경찰 수사권 독립 지지에 양(+)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채택
[가설 1-2] 경찰 효과성 인식은 자치경찰제도 지지에 양(+)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채택
[가설 2-1] 절차적 공정성 인식은 경찰 수사권 독립 지지에 양(+)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채택
[가설 2-2] 절차적 공정성 인식은 자치경찰제도 지지에 양(+)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채택
[가설 3-1] 경찰 효과성 인식은 경찰 신뢰에 양(+)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채택
[가설 3-2] 절차적 공정성 인식은 경찰 신뢰에 양(+)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채택
[가설 4-1] 경찰 신뢰는 경찰 수사권 독립 지지에 양(+)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채택
[가설 4-2] 경찰 신뢰는 자치경찰제도 지지에 양(+)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채택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이 연구는 절차적 공정성 인식과 효과성 인식이 주요 시책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경찰의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절차적 공정성 인식과 효과성 인식이 경찰의 주요 시책인 경찰 수사권 독립 지지와 자치경찰제도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며 매개변수인 경찰 신뢰도 포함하고 분석하여 인과관계 경로에 관한 탐색도 함께 연구하였다. 서구권 중심에서 절차적 공정성과 효과성 인식이 경찰 조직 신뢰 및 정책 지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많이 알려져 있지만 국내에서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절차적 공정성 인식과 효과성 인식이 정책 지지에 미치는지 파악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효과성 인식과 절차적 공정성 인식 중에서 어느 요인이 시민들의 자발적 지지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요인인지 또 어느 요인이 더 효과적인지 논쟁이 지속되고 있으므로(Nagin & Telep, 2017) 그 효과를 실증적으로 추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 조직의 주요 시책 추진에 있어 시민이 참여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확대되면서 시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치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효과성에 비하여 비교적 덜 강조되어 온 절차적 공정성의 영향력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경찰 신뢰를 매개변수로 하는 매개효과 분석을 통해 절차적 공정성 인식과 효과성 인식, 처벌의 엄중성, 처벌의 확실성, 범죄 피해 경험 및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주요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연구를 시행하였다.

이를 토대로 절차적 공정성 인식과 효과성 인식이 주요 시책 지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절차적 공정성 인식과 효과성 인식은 매개변수인 경찰 신뢰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절차적 공정성 인식과 효과성 인식이 경찰 신뢰를 통해 자치경찰제도 및 경찰 수사권 독립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통로임을 알려준다. 둘째, 매개변수를 포함하지 않고 분석한 경우 절차적 공정성 인식과 효과성 인식은 종속변수인 자치경찰제도 지지 및 경찰 수사권 독립 지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이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구한 것으로 매개변수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관계를 완전매개하는지 혹은 부분

매개하는지 비교하는 기준이 된다. 셋째, 매개변수를 포함하고 분석한 경우 매개변수인 경찰 신뢰는 자치경찰제도 및 경찰 수사권 독립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단, 경찰 신뢰가 모형에 포함될 경우 경찰 수사권 독립 지지를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에서는 효과성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절차적 공정성 인식은 경찰 신뢰를 포함하지 않는 모형과 달리 계수 크기가 음수로 확인되었다. 또한 자치경찰제도 지지를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에서는 효과성 인식과 절차적 공정성 인식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경찰 수사권 독립 지지를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에서 절차적 공정성이 경찰 신뢰를 부분매개하여 영향을 미치고 나머지 모형에서는 효과성 인식과 절차적 공정성 인식이 모두 경찰 신뢰를 완전매개하여 주요 시책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통제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범죄 피해 경험 변수의 경우 범죄 피해를 경험하면 사람들의 경찰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주요 통제변수로 제시되었다 (Berthelot, McNeal, and Baldwin, 2018; Callan and Rosenberger, 2011; Skogan, 2009).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모든 모형에서 범죄 피해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예상한 연구 결과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제2절 연구 결과의 의의 및 한계

1. 연구의 의의

이 연구는 정당성 이론을 바탕으로 절차적 공정성 인식과 효과성 인식이 경찰 신뢰를 매개하여 경찰 주요 시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가 가지는 이론적·정책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들이 경찰에 협력하고 지지하는데 있어 규범적 동기의 중요성을 국내 맥락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시민들이 경찰 활동에 지지하는 동기는 효과성 인식과 같은 이해타산적 동기와 절차적 공정성과 같은 규범적 동기로 나뉜다. 이해타산적 동기는 과거부터 경찰 성과와 연관되어 시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요인으로 주목받아 왔지만 정당성에 기반한 규범적 동기들은 비교적 최근 서구권을 중심으로 학술적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규범적 동기는 이해타산적 동기보다 더 강하고 지속적인 효과를 발휘하므로 시민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하는데 근본적인 방안으로 여겨진다(Na & Lee, 2023; Twardawski et al, 2021). 본 연구는 이러한 정당성 기반의 규범적 동기들 역시 국내 맥락에서

도 이해타산적 동기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함의를 지닌다.

둘째, 경찰이 목표로 하는 주요 시책들에 대한 지지를 종속변수로 하여 시민들의 지지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조직 목표와 정책을 설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탐색적·정책적 의의가 있다. 현재 경찰은 경찰 수사권 독립과 자치경찰제도를 주요 시책으로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 주요 시책에 대한 시민의 지지가 그렇게 높지 않아 오히려 경찰이 해당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미래전략을 기획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기본방향과 세부추진 전략 수립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 연구는 시민들이 경찰이 중점 목표로 삼은 정책들을 지지하고 이를 근거로 삼아 주요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찰 효과성뿐만 아니라 절차적 공정성도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제시하여 장차 중차대한 경찰 시책 추진 전략에 있어서 과학적 근거와 자료 분석 결과에 기반한 방향성과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셋째, 매개변수인 경찰 신뢰를 포함하고 분석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 입증에 그치지 않고 인과 메커니즘의 경로를 탐색하였다는 이론적 의의가 있다. 최근 전통적 통계분석의 관점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 존재 여부를 탐구하는 단선적인 연구보다 관계론적 입장에서 독립변수가 어떤 경로를 거쳐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변수 간 관계에 대한 이해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경향이 있다(고길곤, 2021). 본 연구는 국내 맥락에서 절차적 공정성과 효과성이라는 독립변수들이 경찰 신뢰를 매개하여 주요 시책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경찰 정당성, 경찰 신뢰, 시민들의 협력과 지지와 관련한 이론의 주요 변수 간 인과관계의 이해에 기여하고 외적 타당성(external validity)을 확보하는 것에 기여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2. 연구의 한계

경찰이라는 정부 기관의 주요 정책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론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음에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와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횡단적 자료의 사용으로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 간의 관계에서 시간적 선행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2022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경찰청이 공동으로 조사한 횡단면적(cross-sectional) 자료이다.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을 검증할 수 있는 더 적절한 자료가 없었다는 점에서 횡단면적 분석은 불가피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변수들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과학에서 중요한 시간 변수를 모형에 포함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모두 단일자료에서 측정하였으므로 모형에서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를 완전히 배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한계로 존재한다.

둘째, 탐색적 성격을 지니는 만큼 주요 시책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논의하지 못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 및 경찰 정당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시민의 자발적인 협조와 정당성을 확보하는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 절차적 공정성과 효과성, 경찰 신뢰 만을 주요 변수로 삼아 다른 변수들을 포함하지 못한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주요 통제변수인 범죄 피해 경험의 경우 연구에 활용된 모든 회귀분석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처벌의 확실성 변수 역시 모든 분석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치경찰제도 및 경찰 수사권 독립은 더 바람직한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질적 목적뿐만 아니라 형사사법기관 간 권력 균형 등 제도적 목적 역시 존재하여 시민들의 지지 목적이 반드시 경찰에 대한 협력 의사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향후 인터뷰 등 질적연구방법을 통하여 경찰 정당성 구성에 참여하는 경찰 내부 구성원 및 정책 지지의 주체인 시민들의 개념 및 인식을 추가적으로 연구하여 모형에 포함하고 엄밀한 가설 설정을 통한 후속 연구로 모형의 적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길곤. (2019). *통계학의 이해와 활용*. 문우사.
- 고길곤. (2021).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문우사.
- 김구 · 한기민. (2012). 경찰조직의 사회적 자본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지방정부연구*, 15(4), 127-151.
- 김다운. (2022). 법원과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정당성 인식 연구. *정부학연구*, 28(1), 255-288.
- 김수민, & 전용재. (2021). 경찰과의 자발적 접촉이 신고의사에 미치는 영향: 경찰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18(2), 21-42.
- 김소영 · 이준형. (2022). 절차적 정의 인식이 신고의사에 미치는 영향과 경찰신뢰의 매개효과. *한국경찰학회보*, 24(4), 125-151.
- 류준혁. (2012). 시민의 경찰에 대한 인식 분석. *사회과학연구*, 38(3), 171-200.
- _____. (2015).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 확보가 시민의 법준수인식에 미치는 영향. *치안정책연구*, 29(1), 133-165.
- 박동수. (2021). 현행 일원화 자치경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0, 367-386.
- 박미영 · 장철영. (2018). 경찰공무원의 조직공정성 인식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치안행정논집*, 14(4), 1-22.
- 박시영 · 최응렬. (2022). 다차원 경찰정당성 모형 검증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24(6), 139-160.
- 박준희, 안성훈, 박준희, 고가영, 이형근, 최성락, ... & 장일식. (2019). 한국형 자치경찰제 시행 및 정착에 관한 연구 (I).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677.
- 박한호 · 이명우. (2021). 경찰기관의 치안 서비스 성과측정. *한국경찰연구*, 20(4), 99-118.
- 손호중 · 채원호. (2005).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부안군 원전수거물처리장 입지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 39집 제 3호, 87-113.
- 신진욱. (2013). 정당성 정치의 구조와 동학: 막스 베버 정치사회학의 관계론적, 행위론적 재구성. *한국사회학*, 47(1), 35-69.
- 유경화 · 신원형. (2003). 경찰조직에서 리더십 유형과 객관적 조직 성과간의 관계: 집단 효능감의 매개역할. *한국행정학보*, 37(3), 379-398.
- 유영현, & 신성식. (2008).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경찰활동에 대한 신뢰도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2(2), 337-354.
- 이경호. (2014). 중앙행정기관의 조직특성과 조직효과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52(1), 1-34.

- 이영균. (2014). 경찰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경찰연구*, 13(3), 211-238.
- 이영섭. (2017). 경찰 정당성 이론에 대한 분석. *경찰학연구*, 17(4), 95-125.
- 이선우·임현정. (2012). 경찰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6(3), 357-378.
- 이용일, & 장현석. (2020). 경찰에 대한 신뢰도 영향요인 분석: 표현적 시각 모형에서 범 죄두려움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범죄학*, 14(3), 47-67.
- 임창호. (2020). 시민의 법률준수 및 경찰협력에의 영향요인: 경찰 정당성 이론을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20(1), 165-199.
- _____. (2021). 절차적 공정성이 시민의 경찰협력 의도에 미치는 영향: 법률 정당성과 사회적 정체성의 매개효과. *경찰학연구*, 21(1), 161-191.
- 장현석. (2014a). 경찰에 대한 신뢰도 결정요인: 도구적 시각과 표현적 시각의 비교.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3(1), 239-262.
- _____. (2014b). 경찰 신뢰도에 대한 한국과 일본 비교연구. *한국경찰연구*, 13(2), 311-340.
- 장현석·김소희. (2015).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경찰 신뢰도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7(1), 111-136.
- 정선호·서동기. (2016). 회귀분석을 이용한 매개된 조절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방법.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35(1), 257-282.
- 조광래·박미경·이홍재. (2016). 변혁적 리더십과 업무성과 간의 관계에서 커뮤니케이션의 매개효과: 경찰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회보*, 30(1), 1-25.
- 조상현·최재현·김순석. (2015). 문화갈등과 경찰신뢰에 관한 연구-국내 거주 결혼이민여성을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 29(3), 167-198.
- 장재성, & 최낙범. (2021). 절차적 정의와 행정대응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일선 경찰관의 재량권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5(4), 163-199.
- 최낙범. (2022). 경찰성과 측정의 이론적 논의와 과제. *한국경찰연구*, 21(3), 251-288.
- 최천근. (2011). 행정관리가 경찰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행정학보*, 45(2), 351-373.
- 표정환. (2017). 경찰에 대한 대학생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행정안전부. (2019). 자치경찰제 10문 10답. 행정안전부.
- 홍승표·라광현. (2019). 경찰지시 순응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찰신뢰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경찰학회보*, 21(6), 203-228.
- 황기순·김재득·이창원. (2005). 경찰지구대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지방경찰청 경찰지구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9(2), 65-90.

- 황문규. (2020). 자치경찰제 설계 모델 검토: 자치경찰의 수사를 중심으로. *형사정책*, 32(1), 7-33.
- 황의갑. (2013). 경찰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시민들과미시간주 디트로이트 대도시권 한인들 간의 비교연구. *한국경찰연구*, 12(4), 411-434.
- Alin, A. (2010). Multicollinearity. *Wiley interdisciplinary reviews: computational statistics*, 2(3), 370-374.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
- Bayley, D.H. & Bittner, E. (1984). Learning the Skills of Policing,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47(4): 35-39.
- Bayley, D. H. (1996). Police for the Future. *Oxford University Press*.
- Beccaria, C. (1963). *On Crimes and Punishments (introduction by H. Paolucci, Trans.)*. New York: Macmillan. (Original work published 1764).
- Beetham, D. (1991). Max Weber and the legitimacy of the modern state. *Analyse & Kritik*, 13(1), 43-45.
- Bittner, E. (1970). The functions of the police in modern society: A review of background factors, current practices, and possible role models.
- Berthelot, E., McNeal, B. and Baldwin, J. (2018). 'Relationships between Agency-Courts.'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Justice*, 43(4): 768-791.
- Bottoms, A., & Tankebe, J. (2012). Beyond procedural justice: A dialogic approach to legitimacy in criminal justice. *J. Crim. I. & Criminology*, 102, 119.
- Callanan, V. J. and Rosenberger, J. S. (2011). 'Media and Public Perceptions of the Police: Examining the Impact of Race and Personal Experience.' *Policing and Society: An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and Policy*, 21(2): 167-189.
- Cao, L., & Zhao, J. S. (2005). Confidence in the police in Latin America.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3(5), 403-412.
- Chanley, V., T. Rudolph, et al. (2000). The origins and consequences of public trust in government: A time series analysis. *Public Opinion Quarterly* 64(3): 239.
- Cheng, K. K. Y. (2017). Prosecutorial procedural justice and public legitimacy in Hong Kong.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57(1), 94-111.
- Coicaud, J. M. (2002). *Legitimacy and politics: a contribution to the study of political right and political responsibil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rreia, M. E., Reisig, M. D., & Lovrich, N. P. (1996). Public perceptions of state police: An analysis of individual-level and contextual variables. *Journal of*

- criminal justice, 24(1), 17–28.
- Falkenberg, S., Gaines, L. K. & Corner, G. (1991), An Examination of the Constructs Underlying Police Performance Appraisal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19(4), 351–360.
- Feilzer, M. Y. (2009), Not Fit for Purpose! The (Ab-)Use of the British Crime Survey as a Performance Measure for Individual Police Forces. *Policing*, 3(2): 200–211.
- Fyfe, J.J. (1999), Good Policing, in Stojkovic, S, Klofas, J. and Kalinich, D. (eds.), *The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of Criminal Justice Organizations*, 3rd ed., Waveland Press, Prospect Heights, IL, 113–133.
- Gallagher, C., Maguire, E. R., Mastrofski, S. D., & Reisig, M. (2001). *The public image of the police: Final report to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Manassas, VA: George Mason University, Administration of Justice Program.
- Ganjavi, O., LeBrasseur, R., & Whissell, R. (2000). “Night walking safety and overall satisfaction with police services” . 「Policing: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trategies & Management」
- Gibbs, J. P. (1968). Crime, punishment, and deterrence. *The Southwestern Social Science Quarterly*, 515–530.
- Goldstein, H. (1987). Toward Community–Oriented Policing: Potential, Basic Requirements, and Threshold Questions. *Crime & Delinquency*, 33(1): 6–30.
- _____. (1990). Problem–oriented policing. McGraw–Hill: New York.
- Grimmelikhuisen, S. G. and Meijer, A. J. (2014). Effects of Transparency on the Perceived Trustworthiness of a Government Organization: Evidence from an Online Experiment.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24(1): 137–57.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The Guilford Press.
- Hetherington, M. and S. Globetti (2002). Political trust and racial policy preferenc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6(2): 253–275.
- Hinds, L., & Murphy, K. (2007). Public satisfaction with police: Using procedural justice to improve police legitimacy. *Australian & New Zealand journal of criminology*, 40(1), 27–42.
- Hinsch, W. (2008). Legitimacy and justice. *Political legitimization without morality?*, 39–52.
- _____. (2010). Justice, legitimacy, and constitutional rights. *Critical review of international social and political philosophy*, 13(1), 39–54.

- Holgersson, S. & Knutsson, J. (2012). Differences in Performance among Swedish Uniformed Police Officers. *Policing*. 1–8.
- Hough, M., Jackson, J., & Bradford, B. (2013). Legitimacy, trust and compliance: An empirical test of procedural justice theory using the European Social Survey.
- Jackson, J., & Bradford, B. (2010). What is Trust and Confidence in the Police?. *Policing: A journal of policy and practice*, 4(3), 241–248.
- Jackson, J., Bradford, B., Hough, M., Myhill, A., Quinton, P., & Tyler, T. R. (2012). Why do people comply with the law? Legitimacy and the influence of legal institutions.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52(6), 1051–1071.
- Jackson, J., & Gau, J. M. (2016). Carving up concepts? Differentiating between trust and legitimacy in public attitudes towards legal authority.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on trust: Towards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integration*, 49–69.
- Jang, H., Joo, H. J., & Zhao, J. S. (2010). Determinants of public confidence in police: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8(1), 57–68.
- Kasperson, R. E., Golding, D., & Tuler, S. (1992). Social distrust as a factor in siting hazardous facilities and communicating risks. *Journal of social issues*, 48(4), 161–187.
- Ko, K. (2022). *Understanding the Republic of Korea*. Goyang-si: Moonwoosa.
-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KOSIS). (2022). Statistics Korea. <https://kosis.kr/index/index.do>
- Lind, E. A. and Tyler, T. R. (1988). *The social psychology of procedural justice*. Plenum Press.
- Mazerolle, L., Bennett, S., Antrobus, E., & Eggins, E. (2012). Procedural justice, routine encounters and citizen perceptions of police: Main findings from the Queensland Community Engagement Trial (QCET). *Journal of experimental criminology*, 8, 343–367.
- Maslov, A. (2016). Measuring the Performance of the Police. *Miscellaneous Agency*.
- Micheli, Pietro & Neely, Andy. (2010). Performance Measurement in the Public Sector in England: Searching for the Golden Thread.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70(4): 591–600
- Moore, M. H., & Braga, A. (2003). The “bottom line” of policing: What citizens should value (and measure!) in police performance. *In Police Executive*

Research Forum.

- Moynihan, D. P., (2006). Managing for Results in State Government: Evaluating a Decade of Reform.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6(1): 77–89.
- Muir, W.K. (1977). *Police: Streetcorner Politician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IL.
- Na, C., & Lee, B. H. (2023). Improving Voluntary Compliance through Problem–Oriented Governance: A Case Study of South Korea’s Efforts to Increase the COVID–19 Vaccination Rate. *Journal of Asian and African Studies*, 58(2), 174–195.
- Nagin, D. S. (1998). Criminal deterrence research at the outset of the twenty–first century. *Crime and justice*, 23, 1–42.
- Nagin, D. S., & Pepper, J. V. (2012). *Deterrence and the death penalty*.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ies Press.
- Nagin, D. S., & Telep, C. W. (2017). Procedural justice and legal compliance. *Annual review of law and social science*, 13, 5–28.
- OECD (2022), *Building Trust to Reinforce Democracy: Main Findings from the 2021 OECD Survey on Drivers of Trust in Public Institutions*, Building Trust in Public Institution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b407f99c-en>.
- Paternoster, R. (2010). How much do we really know about criminal deterrence. *J. crim. l. & criminology*, 100, 765.
- Pratt, T. C., Cullen, F. T., Blevins, K. R., Daigle, L. E., & Madensen, T. D. (2017). The empirical status of deterrence theory: A meta–analysis. In *Taking stock* (pp. 367–395). Routledge.
- Reiner, R. (1998), Problems of assessing police performance, in Brodeur, P. (Ed.), *How to Recognise Good Policing*, Police Executive Research Forum, Sage, Thousand Oaks, CA.
- Reisig, M. D., Tankebe, J., & Meško, G. (2012). Procedural Justice, Police Legitimacy, and Public Cooperation with the Police Among Young Slovene Adults. *Varstvoslovje: journal of criminal justice & security*, 14(2).
- Rudolph, T. and J. Evans (2005). Political trust, ideology, and public support for government spending.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9(3): 660–671.
- Rudolph, T. (2009). Political Trust, Ideology, and Public Support for Tax Cuts. *Public Opinion Quarterly* 73(1): 144.
- Sanders, B. A. (2008). Using Personality Traits To Predict Police Officer Performance, *Police Strategies & Management*, 31(1), 129–147.
- Sargeant, E., Murphy, K., & Cherney, A. (2014). Ethnicity, trust and cooperation

- with police: Testing the dominance of the process-based model. *European journal of criminology*, 11(4), 500–524.
- Schuck, A. M., & Rosenbaum, D. P. (2011). The Chicago Quality Interaction Training Program: A randomized control trial of police innovation. National Police Research Platform Topical Report.
- Simon, H. (1947). *Administrative Behavior*. New York: Macmillan.
- Skogan, W. G. (2009). Concern about crime and confidence in the police: Reassurance or accountability?. *Police quarterly*, 12(3), 301–318.
- Skogan, W. G., Van Craen, M., & Hennessy, C. (2015). Training police for procedural justice. *Journal of experimental criminology*, 11, 319–334.
- Sobel, M. E. (1986). Some new results on indirect effects and their standard errors in covariance structure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16, 159–186.
- Stone, V., Pettigrew, N., & Willis, C. F. (2000). The views of the public on stops and searches (No. 129). London, England: Home Office, Policing and Reducing Crime Unit, Research, Development and Statistics Directorate.
- Sun, I. Y., Wu, Y., Hu, R., & Farmer, A. K. (2017). Procedural justice, legitimacy, and public cooperation with police: Does Western wisdom hold in China?.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54(4), 454–478.
- Tankebe, J. (2009). Public cooperation with the police in Ghana: Does procedural fairness matter?. *Criminology*, 47(4), 1265–1293.
- _____. (2013). Viewing things differently: The dimensions of public perceptions of police legitimacy. *Criminology*, 51(1), 103–135.
- _____. (2014). The making of ‘democracy’ s champions’ : Understanding police support for democracy in Ghana. *Criminology & Criminal Justice*, 14(1), 25–43.
- _____. (2019). Legitimacy and Regulatory Compliance. *Financial Compliance: Issues, Concerns and Future Directions*, 47–65.
- Tankebe, J., Reisig, M. D., & Wang, X. (2016). A multidimensional model of police legitimacy: A cross-cultural assessment. *Law and human behavior*, 40(1), 11.
- Tschannen-Moran, M., & Hoy, W. K. (2000). A multidisciplinary analysis of the nature, meaning, and measurement of trust.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70(4), 547–593.
- Tyler, T. R. (1990). *Why People Obey the Law*. New Haven, CT: Yale.

- _____. (2003). Procedural justice, legitimacy, and the effective rule of law. *Crime and justice*, 30, 283–357.
- _____. (2004). Enhancing police legitimacy.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93(1), 84–99.
- _____. (2006). *Why People Obey the Law* (2nd ed.).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2006).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Legitimacy and Legitimation. *Annu. Rev. Psychol.* 57: 375–400.
- _____. (2017). 'Procedural Justice and Policing: A Rush to Judgment?' *Annual Review of Law and Social Science*, 13: 29–53.
- Tyler, T. R., & Fagan, J. (2008). Legitimacy and cooperation: Why do people help the police fight crime in their communities. *Ohio St. J. Crim. L.*, 6, 231.
- Tyler, T. R., & Huo, Y. J. (2002). *Trust in the law: Encouraging public cooperation with the police and courts*. Russell Sage Foundation.
- Tyler, T. R., & Lind, E. A. (1992). A relational model of authority in groups. I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5, pp. 115–191). Academic Press.
- Tyler, T. R., Schulhofer, S., & Huq, A. Z. (2010). Legitimacy and deterrence effects in counterterrorism policing: A study of Muslim Americans. *Law & society review*, 44(2), 365–402.
- Twardawski, M., Steindorf, L., & Thielmann, I. (2021). Three pillars of physical distancing: Anxiety, prosociality, and rule complianc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Collabra: Psychology*, 7(1), 22511.
- Weber, M. (2019). *Economy and society: A new transla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 Wheller, L., Quinton, P., Fildes, A., & Mills, A. (2013). *The Greater Manchester Police procedural justice training experiment*. Coventry, UK: College of Policing.

부록

설문조사 질문지

SQ1. 성별

- ① 여성
- ② 남성

SQ2. 귀하의 나이는 만으로 몇 살입니까? 만 _____세

- ① 19세 이하(조사 중단)
- ② 20세 - 29세
- ③ 30세 - 39세
- ④ 40세 - 49세
- ⑤ 50세 - 59세
- ⑥ 60세 - 69세
- ⑦ 70세 이상(조사 중단)

SQ3. 귀하는 어디에서 거주하고 계십니까? [SA] (서울, 인천, 경기 외 조사 중단)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A1. 귀하께서는 다음의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경찰에 검거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범죄유형	설명	매우 낮다	다소 낮다	보통 이다	다소 높다	매우 높다
1	강력범죄	1	2	3	4	5
2	재산범죄	1	2	3	4	5
3	아동학대	1	2	3	4	5
4	학교폭력	1	2	3	4	5
5	성범죄	1	2	3	4	5
6	디지털 성범죄	1	2	3	4	5
7	보이스 피싱	1	2	3	4	5
8	사이버 범죄	1	2	3	4	5
9	음주운전	1	2	3	4	5
10	중대재해	1	2	3	4	5
11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	1	2	3	4	5

A2. 귀하께서는 다음의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받는 현재 처벌의 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죄유형	설명	매우 낮다	다소 낮다	적당하다	다소 높다	매우 높다	
1	강력범죄	살인, 강도, 상해 등	1	2	3	4	5
2	재산범죄	사기, 절도 등	1	2	3	4	5
3	아동학대	신체학대, 정서학대 등	1	2	3	4	5
4	학교폭력	신체폭력, 금품갈취 등	1	2	3	4	5
5	성범죄	성폭력, 성추행 등	1	2	3	4	5
6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 합성, 유포 등	1	2	3	4	5
7	보이스 피싱	전기통신이용 금융사기	1	2	3	4	5
8	사이버 범죄	해킹,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1	2	3	4	5
9	음주운전		1	2	3	4	5
10	중대재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등	1	2	3	4	5
11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	피해자 접근 금지 위반, 보복행위 등	1	2	3	4	5

B1. 귀하께서는 최근 1년간 범죄와 관련하여 (범죄 피의자, 피해자, 목격자 등의 신분으로) 경찰과 직접 대면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구체적인 범죄행위와는 무관하게 단순히 지나가다가 우연히 경찰을 마주친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회)

0. 없음

B2. 귀하께서는 최근 1년간 범죄와 관련하여 (범죄 피의자, 피해자, 목격자 등의 신분으로) 경찰서에 방문하신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회)

0. 없음

B3. 귀하께서 최근 1년간 범죄와 관련하여 경찰과 직접 대면하거나 경찰서에 방문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주시요. (복수 가능)

- ① 범죄 용의자/피의자 신분
- ② 범죄 피해자 신분
- ③ 범죄 신고자/목격자/참고인 신분
- ④ 기타()
- ⑤ 해당 없음

B4-1. 귀하께서는 지금까지 사시면서 한번이라도 본인이 직접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B4-2. 귀하께서는 지금까지 사시면서 한번이라도 주변의 가족, 친한 친구 등의 가까운 지인이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B5. 귀하께서는 아래의 범죄예방과 통제를 위한 경찰의 활동이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범죄유형		설명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효과적이지 않다	보통이다	효과적이다	매우 효과적이다
1	강력범죄	살인, 강도, 상해 등	1	2	3	4	5
2	재산범죄	사기, 절도 등	1	2	3	4	5
3	아동학대	신체학대, 정서학대 등	1	2	3	4	5
4	학교폭력	신체폭력, 금품갈취 등	1	2	3	4	5
5	성범죄	성폭력, 성추행 등	1	2	3	4	5
6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 합성, 유포 등	1	2	3	4	5
7	보이스 피싱	전기통신이용 금융사기	1	2	3	4	5
8	사이버 범죄	해킹,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1	2	3	4	5
9	음주운전		1	2	3	4	5
10	중대재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등	1	2	3	4	5
11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	피해자 접근 금지 위반, 보복행위 등	1	2	3	4	5

B6. 귀하께서는 아래의 범죄예방과 통제를 위한 경찰의 활동이 모든 사람에게 얼마나 공정하게 결정 및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범죄유형		설명	전혀 공정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	보통이다	공정하다	매우 공정하다
1	강력범죄	살인, 강도, 상해 등	1	2	3	4	5
2	재산범죄	사기, 절도 등	1	2	3	4	5
3	아동학대	신체학대, 정서학대 등	1	2	3	4	5
4	학교폭력	신체폭력, 금품갈취 등	1	2	3	4	5
5	성범죄	성폭력, 성추행 등	1	2	3	4	5
6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 합성, 유포 등	1	2	3	4	5
7	보이스 피싱	전기통신이용 금융사기	1	2	3	4	5
8	사이버 범죄	해킹,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1	2	3	4	5
9	음주운전		1	2	3	4	5
10	중대재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등	1	2	3	4	5

11	피해자 위반	보호조치	피해자 접근 금지 위반, 보복 행위 등	1	2	3	4	5
----	-----------	------	--------------------------	---	---	---	---	---

8. 경찰에 대한 신뢰를 묻는 아래 각 문항에 대해 귀하께서 동의하시는 정도를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동의 하지 않는 다	동 의 하 지 않 는 다	보 통 이 다	동 의 하 는 다	매 우 동 의 하 는 다
1) 경찰이 국민들의 요청에 신속하게 응할 것 이라고 믿는다	1	2	3	4	5
2) 경찰이 범죄수사를 잘 할 것 이라고 믿는다	1	2	3	4	5
3)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 이라고 믿는다	1	2	3	4	5
4) 경찰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들을 (예: 아동학대, 성폭력,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 관련) 잘 수행할 것 이라고 믿는다	1	2	3	4	5
5) 경찰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정직 할 것으로 믿는다	1	2	3	4	5
6) 경찰이 업무상 올바른 결정 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1	2	3	4	5
7) 경찰이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 하고 있다고 믿는다	1	2	3	4	5
8)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경찰의 노력에 진정성 이 있다	1	2	3	4	5
9) 나는 전반적으로 경찰을 신뢰 한다	1	2	3	4	5

C6-1. 귀하께서는 최근 검경(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수사의 개시 및 종결 권한)” 이 부여된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C6-2. 귀하께서는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반대 매우 반대	보통	조금 찬성	매우 찬성
1	2	3	4	5

C7-1. 귀하께서는 최근 우리나라에 국가 경찰과 시도 자치경찰의 사무를 구분하여 수행하는 “자치경찰제도” 가 공식적으로 시행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C7-2.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반대	조금 반대	보통	조금 찬성	매우 찬성
1	2	3	4	5

DQ1. 귀하의 결혼 여부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미혼
- ② 기혼
- ③ 이혼/사별

DQ2.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 ② 대학교 재학
- ③ 대학교 졸업
- ④ 대학원 졸업(재학) 이상

DQ3.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사무직 (회사원, 6급 이하 공무원 등)
- ② 판매직/서비스직 (매장 판매 직원 등)
- ③ 전문직/관리직 (교수, 교사, 의사, 간호사, 종교/언론 관련 종사자, 기술전문가, 부장이상 회사원 등)
- ④ 기능/노무직(운전기사, 생산직 근로자, 기능공, 기계 정비, 청소/세탁 종사자, 파출부 등)
- ⑤ 개인사업/자영업 (가게 주인, 개인택시 기사, 학원 강사, 미용사 등)
- ⑥ 프리랜서/아르바이트
- ⑦ 전업주부
- ⑧ 학생
- ⑨ 무직/은퇴
- ⑩ 기타 ()

DQ4. 귀하의 월 평균 가구소득(세전)은 총 얼마 정도입니까? 이자 소득/부수입/보너스/임대 소득 등 모든 소득을 포함해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① 200만원 미만 | ② 200~299만원 |
| ③ 300~399만원 | ④ 400~499만원 |
| ⑤ 500~599만원 | ⑥ 600~699만원 |
| ⑦ 700~799만원 | ⑧ 800~899만원 |
| ⑨ 900~999만원 | ⑨ 1,000만원 이상 |

DQ5. 귀하의 이념적 성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매우 보수적이다
- ② 다소 보수적이다
- ③ 중도적이다
- ④ 다소 진보적이다
- ⑤ 매우 진보적이다

DQ6. 귀하는 현직 대통령의 리더십을 어느 정도 지지하십니까?

- ① 매우 반대
- ② 다소 반대
- ③ 중간
- ④ 다소 지지
- ⑤ 매우 지지

DQ7.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종교가 없다

기독교

① 카톨릭

② 불교

③ 원불교

④ 이슬람

⑤ 기타(_____)

Abstract

The Effect of Procedural Fairness
and Effectiveness
on the Support of Key Policies
: Focusing on The Independence of
Police Investigative Rights
and the Municipal Police System

Jun, Jinwoo

Department of Public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factors that lead to citizens' policy support in order to successfully achieve the original goals of major policies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It aims to establish a research model through theoretical discussions on effectiveness, procedural fairness, and police trust that constitute legitimacy to verify how it affects support for independence of police investigation rights and support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To achieve this goal, a path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police trus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ffectiveness recognition, procedural fairness recognition, the independence of police investigative rights, and the support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erception of effectiveness was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by completely mediating police trust in both support for independence of police investigative rights and support for the municipal police system.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procedural fairness recognition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upport for independence of police investigative rights by partially mediating police trust, and it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upport for the municipal police system.

The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obtained from the abov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not only the perception of effectiveness at the instrumental motives but also the perception of procedural fairness at the normative motives have a positive effect on major policy support. Second, the procedural justification theory, which has been verified mainly in Western countries, can secure external validity in the domestic context. Third, it provides strategic implications in that it can propose a direction and theoretical basis for the promotion of major policies in government activities, including the police.

keywords : Procedural Fairness, Effectiveness, Police Trust, Policy Support, Mediation Effect

Student Number : 2021-27385